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 동 원 부 연구 위원
박 혜 진 연구 조 원

연구 담당

김동원	부연구위원	조사기획 및 집필 책임
박혜진	연구조원	조사진행 및 조사결과 정리
자 문	최지현, 박대식, 김창길, 김병률, 이계임	

머 리 말

새정부가 출범한 2008년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활로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였으며, 농업정책 방향도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강력한 성장산업, 수출산업을 표방하면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입농산물의 위해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농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수요가 증가하였고, 국제 원유값 급등에 따른 농자재값 상승, 국제 곡물값 폭등으로 식량수급 안정에 대한 우려 등 많은 농업·농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이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농업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농업인과 도시민들의 의식과 행태를 파악하고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도시민 1,508명과 농업인 666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새정부 농정 수요 변화, 농식품 안전,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 농업·농촌 가치 인식과 의식변화를 주로 다루었다.

특히, 유기·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실태, 원산지 표시제, 수입농산물 안전성 인식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식품 안전과 관련한 조사를 다양하게 실시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의식에 기초한 정책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이 조사 보고서가 정책담당자, 학계, 농업계 등 다양한 농정 주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전국의 도시민과 현지통신원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8.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이 조사 보고서는 정책연구에 참고할 목적으로 2008년 9월 한 달간 도시민 1,508명과 농업인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임.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1순위로 ‘시장개방 대책’을 꼽았으며, 농업인은 그 다음으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시민은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주문하였음.

정부의 수출농업 추진에 대해 농업인의 과반수 이상(60.2%)이 ‘수출농업은 노력하면 가능성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음.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변화에 대해 농업인의 96.5%가 ‘농자재값 상승으로 영농비가 30%이상 상승’하였다고 응답해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서 생산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였음.

도시민들은 육류와 곡물 구입 시 ‘원산지’를 우선 고려하고, 채소와 과일, 수산물, 외식 시에는 ‘품질과 맛’을 우선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음.

수입식품 구입의향에 대해 ‘수입쌀’은 6.2%, ‘미국산 쇠고기’ 10.6%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호주산 쇠고기 19.0%, 수입과일 21.4%, 수입 가공식품 14.5% 등으로 나타났음.

쇠고기 협상 파동 이후 한우 소비가 ‘줄었다’는 도시민들은 30.6%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수입육과 한우를 구분할 수 없어서’가 36.2%, ‘쇠고기 먹기가 꺼려져서’가 35.6% 등으로 나타났음.

식품구입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한다는 도시민은 74.6%로 높게 나타났으며, 원산지 표시제 강화 조치에 대하여 45.4%가 ‘실효성이 있다’, 21.4%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였음.

현재 거주 여건에 대해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30.0%, 도시민은 49.8%로 19.8%p의 도-농 격차를 보였음.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13.1%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는데, 도시민의 19.3%에 비해 6.2%p 낮았음.

농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도시민의 73.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또한 농촌지역에 ‘특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 도시민도 85.6%로 높게 나타났음.

10년 후 농촌생활이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고 전망한 도시민은 2006년 33.5%, 2008년 29.4%로 긍정적인 전망이 낮아지고 있으며, 농업인은 18.0%에 그쳐 도시민과 차이를 보였음.

농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도시민은 93.8%로 2006년 조사결과보다 중요성 인식 비율이 5.4%p 증가해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농업보호와 농촌 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에는 40.5%가 ‘찬성’해 2006년 52.8%에 비해 지지도가 약화되는 추세임.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해 농업보호 의식도 지난해와 비슷한 60.4% 수준에 그쳐 하락추세에 있음.

‘농산물이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안전성과 가격 우선’이라는 도시민은 61.3%로 나타났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 구입할 것’이라는 의견도 38.0%로 2006년보다 2.0%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곡물자급률을 훨씬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006년(59.5%)까지 하락했으나 식량자급률에 대한 중요성 홍보 등을 통해 2008년 71.7%까지 상승함.

이밖에,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22.2%로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자녀에게 영농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8.4%, ‘승계할 것’이라는 응답은 8.0%에 그쳐 영농승계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사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납세자로서의 직접 지원 의지는 매년 약화되고 있어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함께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을 꼽고 있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도시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식품관리 시스템의 점검과 개선 노력이 요구됨.

ABSTRACT

2008 The Nation opinion research to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This research paper is a summary of 2008 The nation opinion research to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conducted with 666 people relating to agriculture and 1,508 people living in city area during September, 2008.

According to the research, people living in rural area and city chose the first agriculture policy which has to be focused and proceeded as the “preparation of market opening”. People living in rural area chose " the stabilization of price and agricultural product supply and demand as the second meanwhile people in city area chose " ensuring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

More than half of people relating to agriculture(60.2%) expressed positive opinion on the promotion of agriculture product proceeded by the Government that It can bring a positive result upon efforts in agriculture export.

In terms of the change in production cost caused by the price increasing of raw material, almost all people relating to agriculture (96.5%) answered that the cost has been increased up to 30% because of the price increase of raw material, which indicates the large increase on production cost.

People living in city area answered that they check the origin when they purchase meat and grain product and “the quality and taste” for vegetable, fruit, fishes and going out for a meal.

They did not answer positively whether they are willing to buy imported rice (6.2%) and beef from America (10.6%). Both of two showed the lowest figure. However, 19.0% of people said that they are willing to buy beef from Australia, 21.4% for fruits from foreign country and 14.5% for imported processed food.

After the crisis of Beef trading negotiation, 30.6% of people living in city area answered that they reduced the consumption of beef. The reasons they suggested were “unable to divide Korean meat and imported meat(35.2%)” and “afraid of eating beef(35.6%)”.

About 74.6% of people living in city area answered that they confirm the origin of the product when they purchase food, which is very high proportion. For the enhancement policy of origin display, 45.4% of people assessed that it is working and 21.4% of people answered that it doesn't have any effect. For current residence environment, 49.8% of people in city area expressed

satisfaction while only 19.8% of people in rural area answered satisfaction. In terms of the quality of living, about 13.1% of people in rural area said that they are having high quality of life. However, people in city area who answered the same reached to 19.3% which is 6.2%p higher than the figure mentioned before. About 73.3% of people in city area said that they are for the increase of budget on rural area welfare. Also 85.6% of people in city area agreed that rural area needs special welfare policy. Both of the 2 questions showed high positive rate.

Researchers: Dong-Weon Kim and Hye-Jin Park

E-mail address: dongweon@krei.re.kr, frog78@krei.re.kr

차 례

제1장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1
- 2. 조사 방법 2
- 3. 자료처리 및 분석 5

제2장 조사 결과

- 1. 농업·농촌의 가치인식과 의식변화 6
- 2.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18
- 3. 식품안전과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인식 27
- 4. 농촌복지와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44

제3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 1. 자유 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건의 요지 53
- 2.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55

제4장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 조사 결과 요약 57
- 2. 시사점 63

부록 1: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책건의 전문 66

부록 2: 조사표(도시민, 농업인) 92

참고 문헌 107

표 차 례

제1장

표 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4
-----------------------------	---

제2장

표 2-1.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도시민)	7
표 2-2. 현재/미래 농업·농촌의 역할 인식 1순위(도시민)	8
표 2-3.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도시민)	9
표 2-4.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도시민)	11
표 2-5. 향후 농촌거주 구체적 시기(도시민)	11
표 2-6. 농촌 거주희망 이유(도시민)	12
표 2-7. 현재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농업인)	14
표 2-8.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인(농업인)	15
표 2-9.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만족도(농업인)	15
표 2-10. 농업종사의 불만족 요인(농업인)	17
표 2-11. 은퇴 후 경작지 처리 방식(농업인)	18
표 2-12. 새정부 임기 중 농업·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정도	19
표 2-13. 평소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관심정도(도시민)	21
표 2-14.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인식(도시민)	23
표 2-15.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시 농산물 구입 의향(도시민)	23
표 2-16. 현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농업인)	24
표 2-17. 수출농업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농업인)	25
표 2-18. 농자재값 상승 등의 영농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농업인)	27
표 2-19.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의 이해정도(도시민, 농업인)	28

표 2-20. 농축산물과 식품 구입 시 가장 우선하는 고려 사항(도시민)	30
표 2-21. 국산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정도(도시민)	32
표 2-22. 수입식품 구입 의향(도시민)	32
표 2-23. 식품구매 시 원산지 표시 확인 여부(도시민)	35
표 2-24. 친환경농산물 구입 경험여부(도시민)	36
표 2-25.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주요동기(도시민)	37
표 2-26. 국산과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정도(도시민)	38
표 2-27. 농축산물 생산·판매 시 우선 고려 사항(농업인)	39
표 2-28. 국산과 수입 농축산물의 안전성 인식 수준(농업인)	40
표 2-29 농업인 자신이 생각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점수(농업인)	40
표 2-30.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농업인)	41
표 2-31. 기후온난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농업인)	44
표 2-32.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45
표 2-33. 현재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정도	45
표 2-34. 농촌의 특별 복지정책의 필요성(도시민)	47
표 2-35.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증대에 관한 견해(도시민)	47
표 2-36.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추진 정책(농업인)	49
표 2-3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수여 여부(농업인)	51

제3장

표 3-1. 농정건의 요지 집계	54
-------------------------	----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10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	10
그림 2-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과 세금 부담 의향(도시민)	13
그림 2-3. 식량자급도에 대한 의식(도시민)	13
그림 2-4. UR출범 이후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변화 추이(만족 응답)	16
그림 2-5. 자녀 영농 승계 계획 의향(농업인)	17
그림 2-6.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1순위	20
그림 2-7. 최근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도시민)	22
그림 2-8.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최근 1년간의 생산비 변화(농업인)	26
그림 2-9.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우선 지원책(농업인)	26
그림 2-10. 식품의 주된 구입처(도시민)	29
그림 2-11. 식품 품질에 관한 정보경로(도시민)	31
그림 2-12.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 이후 한우소비량	33
그림 2-13. 한우 소비 줄인 이유(도시민)	34
그림 2-14. 원산지표시제 강화 조치 평가(도시민)	35
그림 2-15. 친환경농산물 인증 내용에 대한 인지와 이해정도(도시민)	36
그림 2-16.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정도(도시민)	38
그림 2-17. 친환경농업 도입 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농업인)	42
그림 2-18.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농업인)	42
그림 2-19.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인식정도(농업인)	43
그림 2-20. 고령농을 위한 우선 지원책(1순위 중심)	46
그림 2-21. 농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농업인)	48
그림 2-22.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복지분야(농업인)	49

그림 2-2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인식정도(농업인)	50
그림 2-24.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식정도(농업인)	51
그림 2-25. 가장 우선적으로 수립 또는 개선해야 할 선진복지정책(농업인)	52

제 1 장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현장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978년 개원 이래 현지통신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이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2008년도 조사는 2006년에 이어 조사대상을 도시민까지 포함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 고조, 국제 원유값 급등에 따른 농자재값 상승, 국제 곡물값 폭등 등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졌던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인식과 의식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음.

2. 조사 방법

1.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 조사는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시민 1,508명과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666건 회수)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면접조사를, 농업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
- 도시민의 경우, 전국 도시지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농촌 및 농업관련 종사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크기는 1,508명으로 전국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성·연령별 할당표본추출을 실시하였고,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 이었음.
- 농업인의 경우,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666건(유효응답률 33.3%)의 조사표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1.2. 조사 문항 구성

- 조사문항은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 농업·농촌가치 인식, 농산물 안전성 인식과 소비패턴 변화, 농업인 의식변화 등 도시민과 농업인 공통문항 7문항과 농업인 22문항, 도시민 28문항으로 설계하였음.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도시민의 지역별 분포는 특별/광역시 거주자가 55.6%, 일반시 거주자가 44.4%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주부가 25.3%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22.3%, 사무직 18.6%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음.
- 농업인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60.8%로 집계되었고, 경작 규모는 1.5ha 이상이 5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학력별 분포는 중졸(27.9%)과 고졸(40.2%)이 대다수였고, 대졸(퇴) 이상도 8.4%(56명)로 나타났음.¹⁾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농촌에서 독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 지역 농·축·임협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지역별 분포나 경작규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표 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도시민(N=1,508)		농업인(N=666)	
구 분	빈 도(%)	구 분	빈 도(%)
성별		연령별	
남 자	758(50.3)	60세 미만	194(29.1)
여 자	750(49.7)	60세 이상	405(60.8)
연령별		모름/무응답	67(10.1)
20 대	345(22.9)	학력별	
30 대	372(24.7)	초 졸 이하	92(13.8)
40 대	368(24.4)	중 졸	186(27.9)
50 대	263(17.4)	고 졸	268(40.2)
60 대 이상	160(10.6)	대졸(퇴)이상	56(8.4)
학력별		모름/무응답	64(9.6)
초등졸 이하	79(5.2)	주재배작목	
중 졸	135(9.0)	수 도 작	306(45.9)
고 졸	632(41.9)	과 수	91(13.7)
대 재 이 상	652(43.2)	노지채소	36(5.4)
모름/무응답	10(0.7)	축 산	52(7.8)
직업별		시설원예	53(8.0)
사 무 직	280(18.6)	특 작	47(7.1)
생 산 직	267(17.7)	기 타	14(2.1)
자 영 업	337(22.3)	모름/무응답	67(10.1)
주 부	381(25.3)	연평균 소득	
학 생	154(10.2)	2천만원 미만	399(59.9)
무직 / 기타	86(5.7)	2천만원 이상	199(29.9)
농/임/어업	3(0.2)	모름/무응답	68(10.2)
지역규모별		경작규모	
특별/ 광역시	838(55.6)	1.5ha 미만	255(38.3)
일 반 시	670(44.4)	1.5ha 이상	345(51.8)
월평균 소득별		모름/무응답	66(9.9)
150만원 미만	183(12.1)	영농경력	
150~249만원	380(25.2)	20년 미만	9(1.4)
250~349만원	502(33.3)	20년 이상	582(87.4)
350~449만원	248(16.4)	모름/무응답	75(11.3)
450만원 이상	172(11.4)	자녀 승계 의지	
모름/ 무응답	23(1.5)	있다	77(11.6)
농촌거주 경험		없다	343(51.5)
있음	810(53.7)	아직 모르겠다	179(26.9)
없음	698(46.3)	무응답/모름	67(10.1)
농업인 가족별			
있음	488(32.4)		
없음	1,020(67.6)		

3. 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편집→부호화→정제 과정을 거쳐 통계프로그램인 SAS를 이용하여 기초 통계처리 하였음.
-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문항에 대한 응답 중 주요 사안의 인식차이 비교를 빈도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일부 문항은 각 문항을 종속변수로, 응답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해 계층 간 인식을 비교하였음.
- 또한, 이번 조사 결과와 '94년 이후 조사 결과를 일부 대비하여 연도별 의식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음.

제 2 장

조 사 결 과

1. 농업·농촌 가치인식과 의식변화

- 도시민을 대상으로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현재 또는 앞으로 농업·농촌이 중요해질 역할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 농업·농촌의 가치인식에 대해 살펴보았음.
-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와 농촌생활 수준 변화의 평가 및 기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농업인 의식의 변화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해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음.

1.1. 도시민 93.8% “농업·농촌 앞으로도 중요할 것”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농업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도시민의 인식 비율 85.9%와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 7.9%를 합쳐 도시민의 93.8%가 향후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음.

- 이같은 결과는 2년전 조사결과²⁾보다 5.4%p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도시민)

단위: 명, %

구 분	'08년 KREI		'06년 KREI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1,295	85.9	1,221	81.4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119	7.9	105	7.0
앞으로 중요할 것 (소계)	1,414	93.8	1,326	88.4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32	2.1	49	3.3
관심 있게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56	3.7	125	8.3
모름/무응답	6	0.4	-	-
합 계	1,508	100.0	1,500	100.0

1.2. 농업·농촌의 역할 1순위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꼽아

-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해 도시민은 현재와 미래 모두 '식량의 안정적 공급'(현재 75.5%, 미래 50.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 '자연환경 보전'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특히,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중요성은 2년전 조사결과에 비해 증가하여(현재 33.2%p, 미래 14.0%p) 시간이 흐를수록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미래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원생활 공간'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현재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특징적임.

2) 농업·농촌에 대한 2006년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2-2. 현재/미래 농업·농촌의 역할 인식 1순위(도시민)

단위: %

구 분	'08년 KREI		'06년 KREI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식량의 안정적 공급	75.5	50.1	42.3	36.1
국토의 균형발전	10.5	13.5	24.3	22.8
자연환경 보전	8.5	15.2	10.9	13.7
전통문화의 계승	1.3	5.6	10.8	11.4
관광 및 휴식의 장소	1.7	6.4	7.2	8.0
진원생활의 공간	2.4	9.0	4.4	7.8
기타	0.1	0.1	0.1	0.1
모름/무응답	0.1	0.1	-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3. 농업·농촌의 ‘식량안보 기능’ 가치 인식 92.6%

- 농업·농촌의 역할과 가치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12개 문항에 대한 도시민의 응답은, ‘동의한다’는 비중이 7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교과과정 농촌체험 의무화(73.9%), 농업과 국가경제의 관계(85.9%), 농업의 경제발전기여(83.0%),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농산물가격(68.6%), 농산물의 상대적 안전성(86.7%), 농가소득 보상(82.1%), 식량안보기능(92.6%)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음.
- 반면에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 가능성(59.6%),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60.9%), 효율성 낮은 농업에 대한 투자 삭감(81.8%) 등의 문제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녀의 농업종사 지원(동의: 47.9%), 농업·농촌을 위한 세금(동의: 54.2%) 문제와 같이 응답자 개인과 1차적으로 직결된 문제에서는 다소 대립적인 의견이 나타남.

-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이 축소되면 식량안보 기능도 약해진다’는 의견이 '07년 82.9%에 비해 9.7%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음.

표 2-3.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도시민)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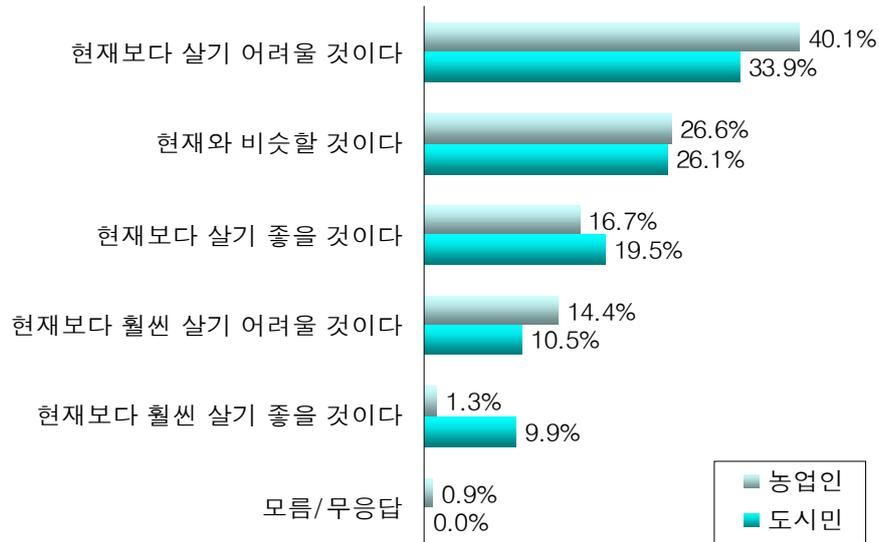
구 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촌체험을 의무화 해야한다	1,115	73.9	392	26.0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1,295	85.9	212	14.1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722	47.9	785	52.1
농업이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1,251	83.0	256	17.0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609	40.4	899	59.6
우리 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있다	588	39.0	918	60.9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1,034	68.6	473	31.4
우리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1,307	86.7	200	13.3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274	18.2	1,234	81.8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다	817	54.2	691	45.8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가 농가소득을 보상해 줘야 한다	1,238	82.1	270	17.9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도 약해질 것이다	1,396	92.6	112	7.4

* 모름/무응답 제외

1.4. ‘10년 후 농촌 살기 좋아질 것’ 도시민 29.4%, 농업인 18.0%로 감소세

-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으로 전망한 도시민 비율이 '06년 33.5%, '08년 29.4%로 긍정적인 전망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또한, 농업인들의 긍정적인 전망은 18.0%에 그쳐 도시민과 차이를 보였음.
-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다’(훨씬 합산)는 부정적인 전망은 도시민 44.4%, 농업인 54.5%로 나타났음.

그림 2-1. 10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도시민, 농업인)



1.5. 도시민 62.8% “향후 농촌에 거주할 의향 있다”

- 도시민에게 은퇴나 기타 여건이 되는 경우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62.8%가 ‘거주 의향이 있다’(매우, 조금 합산)고 응답하였고, ‘없다’(별로, 전혀 합산)는 의견도 37.2%로 나타났다.
- 농촌거주 의향이 있는 도시민은 '06년 조사결과(71.3%)보다 8.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인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함.

표 2-4.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도시민)

단위: 명, %

구 분	'08년 KREI		'06년 KREI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많다	297	19.7	325	21.7
조금 있다	650	43.1	744	49.6
있다 (소계)	947	62.8	1,069	71.3
별로 없다	342	22.7	315	21.0
전혀 없다	219	14.5	116	7.7
없다 (소계)	561	37.2	431	28.7
합 계	1,508	100.0	1,500	100.0

- 향후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947) 중 51.1%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하였고, 장기적인 계획(10년 이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합산)을 가진 도시민은 81.4%로 나타나 농촌 거주가 실제 귀농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판단됨.

표 2-5. 향후 농촌거주 구체적 시기(도시민)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3년 내	29	3.1
5년 내	58	6.1
10년 내	88	9.3
10년 이후	287	30.3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484	51.1
모름/무응답	1	0.1
합 계	947	100.0

- 향후 농촌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는 농촌거주 희망자(N=947)의 62.4%가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19.4%) 순이었음.

-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라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 비중이 높았음.

표 2-6. 농촌 거주희망 이유(도시민)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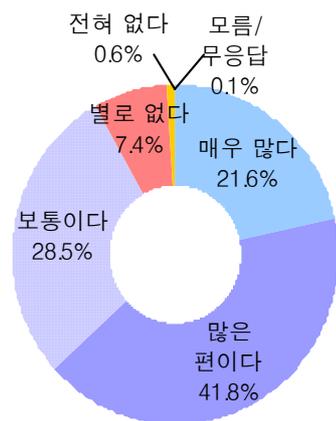
구 분	빈도	비율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44	4.6
농업을 경영해 안전한 농산물을 자급하기 위해	30	3.2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591	62.4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14	1.5
경로사상과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18	1.9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184	19.4
땅값과 생활비가 도시보다 싸므로 여유있게 살 수 있어서	52	5.5
기타	6	0.6
모름/무응답	8	0.8
합 계	947	100.0

1.6. 농촌의 공익기능 가치유지를 위한 지원의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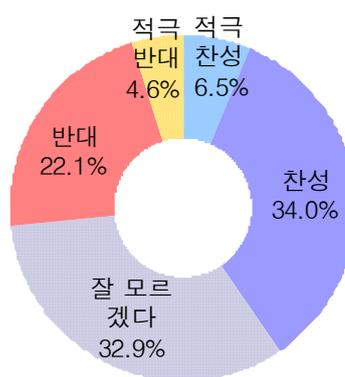
- 농업·농촌이 가진 1차적인 기능인 먹거리 생산 이외의 사회·문화적 공익 기능 가치가 ‘많다’(매우 합산)는 적극적인 응답이 63.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없다’는 응답은 8.0%로 낮게 나타나 공익적 기능 가치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하지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 대해 찬성 40.5%, 반대 26.7%, 유보적 의견 32.9%로 다양한 견해가 있었음.
-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40.5%)은 전년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06년 52.8%에 비해 지지도가 약화되는 추세임.

그림 2-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과 세금 부담 의향(도시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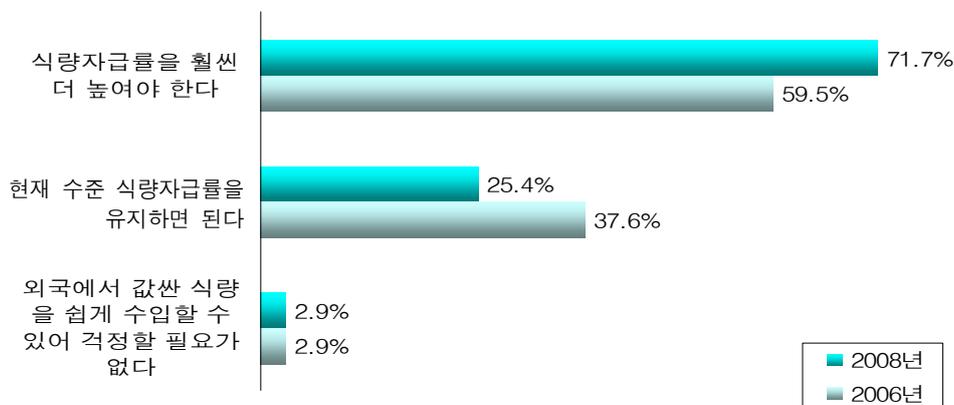
<세금추가 부담 의향>



1.7. “식량자급률 훨씬 높여야” 2006년에 비해 12.2%p 증가

-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하락에 대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71.7%로 '06년(59.5%)보다 12.2%p 상승하였음. 이는 국제곡물가격 급등, 식량자급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나타난 반응으로 파악됨.

그림 2-3. 식량자급도에 대한 의식(도시민)



1.8. 농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년전보다 6.2%p 상승

-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약간, 매우 합산)는 응답은 22.7%로 '06년(16.5%)보다 6.2%p 상승하였으며, ‘불만족한다’(약간, 매우 합산)는 응답은 36.8%로 '06년(41.9%)에 비해 5.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승된 것으로 파악됨.
- ‘만족한다’는 인식은 60세 이상, 연평균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2-7. 현재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농업인)

단위: 명, %

구 분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무응답/모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 미만	6	3.1	35	18.0	78	40.2	50	25.8	24	12.4	1	0.5	194
60세 이상	14	3.5	87	21.5	162	40.0	93	23.0	46	11.4	3	0.7	405
모름/무응답	1	1.5	8	11.9	26	38.8	19	28.4	13	19.4	.	.	67
연평균소득													
2천만원 미만	13	3.3	68	17.0	162	40.6	99	24.8	53	13.3	4	1.0	399
2천만원 이상	7	3.5	52	26.1	79	39.7	45	22.6	16	8.0	.	.	199
모름/무응답	1	1.5	10	14.7	25	36.8	18	26.5	14	20.6	.	.	68
합계	21	3.2	130	19.5	266	39.9	162	24.3	83	12.5	4	0.6	666

-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N=245)는 불만족 요인으로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31.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의료시설 등 복지 미흡’(21.6%),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11.0%)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2-8.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인(농업인)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	78	31.8
교육 여건 열악	25	10.2
의료시설 등 복지 미흡	53	21.6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	27	11.0
문화여과시설 미흡	24	9.8
기타	33	13.5
모름/무응답	5	2.0
합 계	245	100.0

1.9.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22.2%로 꾸준한 상승세

-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매우, 약간 합산)는 응답은 22.2%로 '06년(21.2%)에 비해 1.0%p 소폭 상승하였음.
-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도 인식에서 ‘매우 불만족’ 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계층은 60세 미만, 연평균소득 2천만원 미만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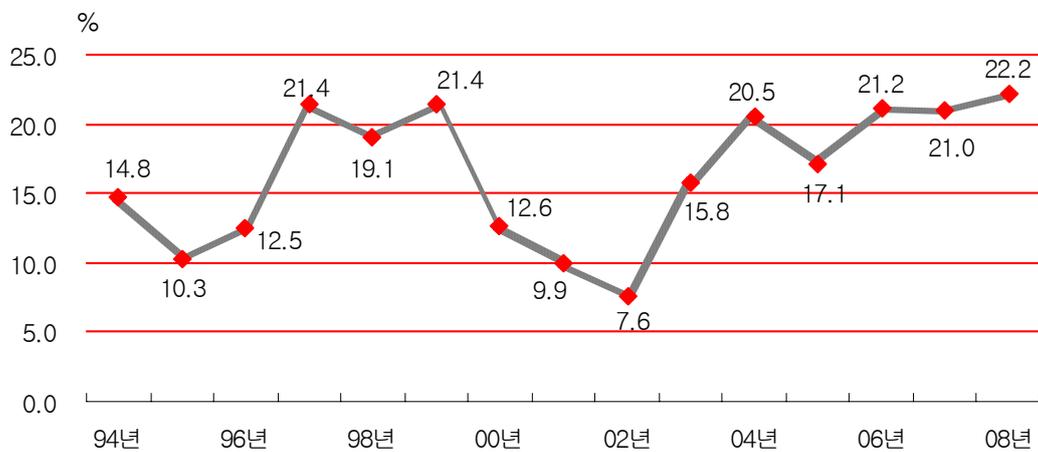
표 2-9.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만족도(농업인)

단위: 명, %

구 분	'08년 KREI		'06년 KREI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만족한다	21	3.1	31	3.6
약간 만족한다	127	19.1	151	17.6
만족한다 (소계)	148	22.2	182	21.2
그저 그렇다	224	33.6	347	40.5
약간 불만이다	199	29.9	241	28.1
매우 불만이다	91	13.7	80	9.3
불만이다 (소계)	290	43.6	321	37.4
모름/무응답	4	0.6	7	0.8
합 계	666	100.0	857	100.0

-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놓고 보면, UR 출범 이후 등락을 거듭해 오던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2002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반전해 2008년도에도 20%대 (22.2%)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2-4. UR출범 이후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변화 추이(만족 응답)



-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N=290)는 불만족 요인으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를 가장 많이(44.8%) 꼽았음.
- 다음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 불안’(24.8%),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14.5%), ‘힘든 육체 노동’(11.0%),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2.4%) 순으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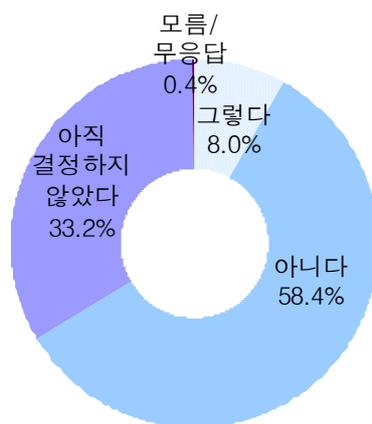
표 2-10. 농업종사의 불만족 요인(농업인)

구 분	단위: 명, %	
	빈도	비율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130	44.8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32	11.0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42	14.5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 불안	72	24.8
농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좋지 않다	7	2.4
기타	3	1.0
모름/무응답	4	1.4
합 계	290	100.0

1.10. 농업인 자녀 영농 승계 의지 약해

- 자녀에게 영농을 승계할 계획이 ‘있다’는 농업인은 8.0%에 그쳤고, ‘승계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8.4%,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3.2%로 영농 승계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자녀 영농 승계 계획 의향(농업인)



- 영농을 자녀에게 승계할 의향이 없다는 농업인(N=389)은 은퇴 후 농지를 ‘임대’(27.5%)할 계획이라는 응답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작보다는 간접 경작을 통해 소득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파악됨.

- 그 외에 ‘매각’ 21.1%, ‘인척이나 타인에게 승계’ 9.5%로 응답하였으며,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는 39.3%로 나타남.

표 2-11. 은퇴 후 경작지 처리 방식(농업인)

단위: 명, %

구 분	매각		임대		인척이나 타인에게 승계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		무응답/모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 미만	23	18.1	32	25.2	9	7.1	58	45.7	5	3.9	127
60세 이상	50	22.8	61	27.9	21	9.6	82	37.4	5	2.3	219
모름/무응답	9	20.9	14	32.6	7	16.3	13	30.2	.	.	43
경작규모											
1.5ha미만	37	24.8	38	25.5	14	9.4	58	38.9	2	1.3	149
1.5ha이상	36	18.4	56	28.6	15	7.7	81	41.3	8	4.1	196
모름/무응답	9	20.5	13	29.5	8	18.2	14	31.8	.	.	44
합계	82	21.1	107	27.5	37	9.5	153	39.3	10	2.6	389

2.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정부의 농업·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정도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음.
- 이와 함께 도시민에게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정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고, 농업인에게는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농환경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음.

2.1.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1순위 ‘시장개방 대책’

- 새정부가 임기 중 농업·농촌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정도를 파악한 결과, ‘잘 풀어갈 것’(매우 합산)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도시민 19.6%, 농업인 26.4%로 나타났다.
- 또한, ‘잘 풀어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도시민 43.5%, 농업인 63.0%로 나타나 도시민보다 농업인 절반 이상이 새정부 농업정책에 거는 기대가 낮았음.

표 2-12. 새정부 임기 중 농업·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정도

단위: 명, %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	50	3.3	16	2.4
잘 풀어갈 것	246	16.3	160	24.0
잘 풀어갈 것 (소계)	296	19.6	176	26.4
보통	556	36.9	67	10.1
잘 풀어나가지 못할 것	512	34.0	328	49.2
매우 잘 못 풀어갈 것	143	9.5	92	13.8
잘 못 풀어갈 것 (소계)	655	43.5	420	63.0
모름/무응답	1	0.1	3	0.4
합 계	1,508	100.0	6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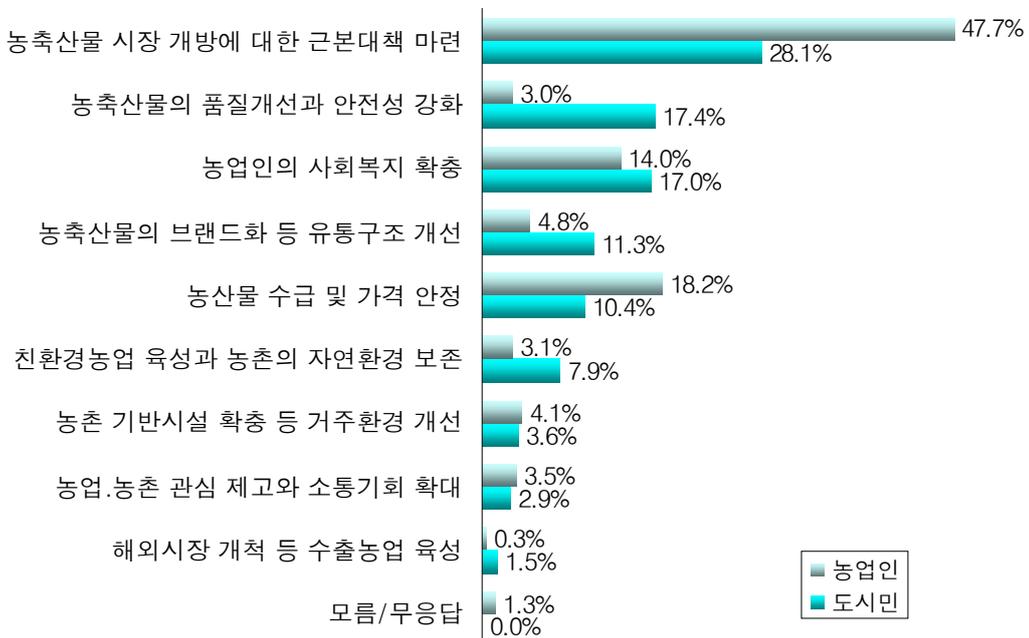
-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1순위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도시민 28.1%, 농업인 47.7%)을 꼽아 개방확대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임.
- 새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사³⁾에서도 농업인들이 새정부의 최우선 농

3) 2008년 1월 한 달간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업정책 과제로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마련’을 꼽았던 것을 감안하면 농업인들은 ‘개방 피해대책’을 가장 큰 정책요구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음.

- ‘개방에 따른 대책’ 다음으로 요구하는 정책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뚜렷이 구별되는데, 도시민은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17.4%)를 꼽은 반면 농업인은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18.2%)을 꼽았음.
- 이에 반해 ‘수출농업 육성’, ‘국민 관심제고와 소통기회 확대’, ‘거주환경 개선’ 등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정책 관심도가 낮은 분야로 나타났음.

그림 2-6.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1순위



2.2.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있다” 55.1%

- 평소 농업정책을 포함해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 시민은 절반이 넘는 55.1%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관심이 ‘별로 없다’(42.1%)거나 ‘전혀 없다’(2.8%)는 응답자도 과반수에 가까워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대 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관심 있다’(매우, 대체로 합산)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표 2-13. 평소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관심정도(도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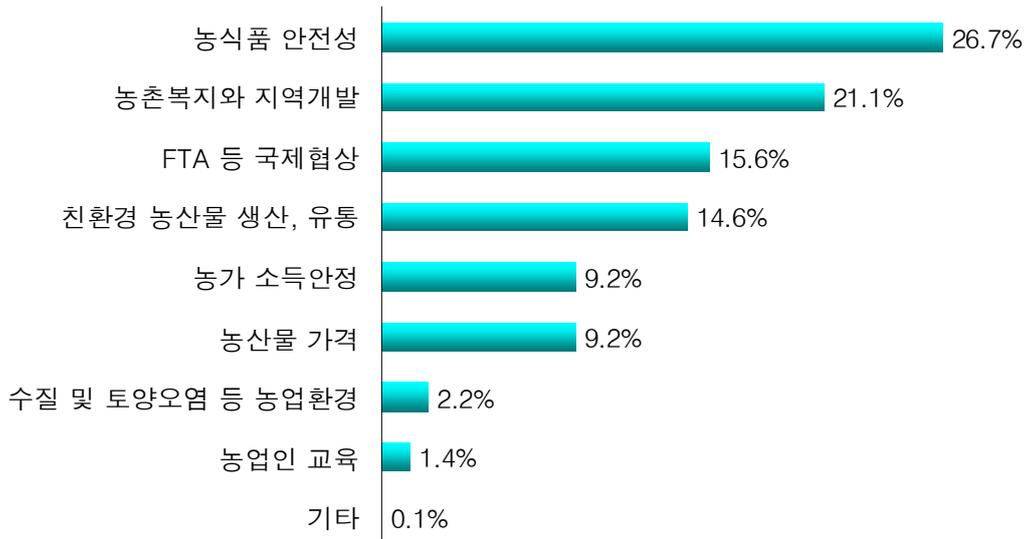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많다	172	11.4
대체로 많은 편이다	659	43.7
있다 (소계)	831	55.1
별로 없다	635	42.1
전혀 없다	42	2.8
없다 (소계)	677	44.9
합계	1,508	100.0

2.3. 최근 가장 관심 많은 농업정책 분야 “농식품 안전성” 꼽아

- 최근 도 시민이 관심을 갖는 농업정책 분야 1순위는 ‘농식품 안전성’(26.7%), ‘농촌복지와 지역개발’(21.1%)이었으며, ‘FTA 등 국제협상’(15.6%),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14.6%)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 최근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 (도시민)



2.4.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 보여

- 현재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 도시민의 60.4%가 ‘농산물 시장보호’(시장개방 안 된다 24.1%, 최소화 해야한다 36.3%)를 주장함. 이는 2006년 조사결과(60.7%)와 비슷한데, 이를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더 이상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안 된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농촌거주 유경험자(26.9%), 농업인 가족(28.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시장 보호’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표 2-14.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인식(도시민)

단위: 명, %

구 분	'08년 KREI		'06년 KREI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더 이상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안 된다	363	24.1	362	24.1
국내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548	36.3	549	36.6
보호 (소계)	911	60.4	911	60.7
농산물 시장개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478	31.7	500	33.3
농산물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118	7.8	89	5.9
개방 (소계)	596	39.5	589	39.2
모름/무응답	1	0.1	-	-
합 계	1,508	100.0	1,500	100.0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시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고,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도 19.4%로 나타나 도시민의 61.3%는 실리를 우선하는 것으로 파악됨.
- 반면,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도시민은 38.0%에 그쳐 안전성 등 품질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15.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시 농산물 구입 의향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573	38.0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293	19.4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632	41.9
기타	8	0.5
모름/무응답	2	0.1
합 계	1,508	100.0

2.5. 과반수 이상 농업인 “현정부 농정 기대 못미쳐”

- 농업인에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매우, 대체로 합산)는 응답은 5.6%에 그쳤으며, ‘불만이다’(대체로, 매우 합산)이라는 응답은 50.6%에 달해 현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평가를 유보한 농업인은 42.0%로 나타났음.
- ‘불만이다’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응답을 작목별로 살펴보면, 축산 농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과수 농가가 상대적으로 불만족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6. 현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농업인)

단위: 명,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무응답/모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 미만	1	0.5	1	0.5	57	29.4	77	39.7	51	26.3	7	3.6	194
60세 이상	.	.	33	8.1	195	48.1	128	31.6	45	11.1	4	1.0	405
모름/무응답	.	.	2	3.0	28	41.8	26	38.8	10	14.9	1	1.5	67
주재배작목													
수도작	.	.	13	4.2	136	44.4	104	34.0	48	15.7	5	1.6	306
과수	.	.	13	14.3	40	44.0	31	34.1	6	6.6	1	1.1	91
노지채소	.	.	2	5.6	12	33.3	13	36.1	7	19.4	2	5.6	36
축산	.	.	1	1.9	14	26.9	23	44.2	14	26.9	.	.	52
시설원예	.	.	2	3.8	21	39.6	21	39.6	9	17.0	.	.	53
특작	1	2.1	.	.	22	46.8	11	23.4	10	21.3	3	6.4	47
기타	.	.	2	14.3	7	50.0	4	28.6	1	7.1	.	.	14
모름/무응답	.	.	3	4.5	28	41.8	24	35.8	11	16.4	1	1.5	67
합계	1	0.2	36	5.4	280	42.0	231	34.7	106	15.9	12	1.8	666

2.6. 농업인 10명 중 6명은 “수출농업 가능성 있다”

- 정부가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수출농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과반수가 넘게(60.2%) ‘노력하면 가능성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음.
- 반면 ‘노력해도 가능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농업인 비율은 23.0%로 나타나 긍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였으며,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도 15.8%로 집계되었음.

표 2-17. 수출농업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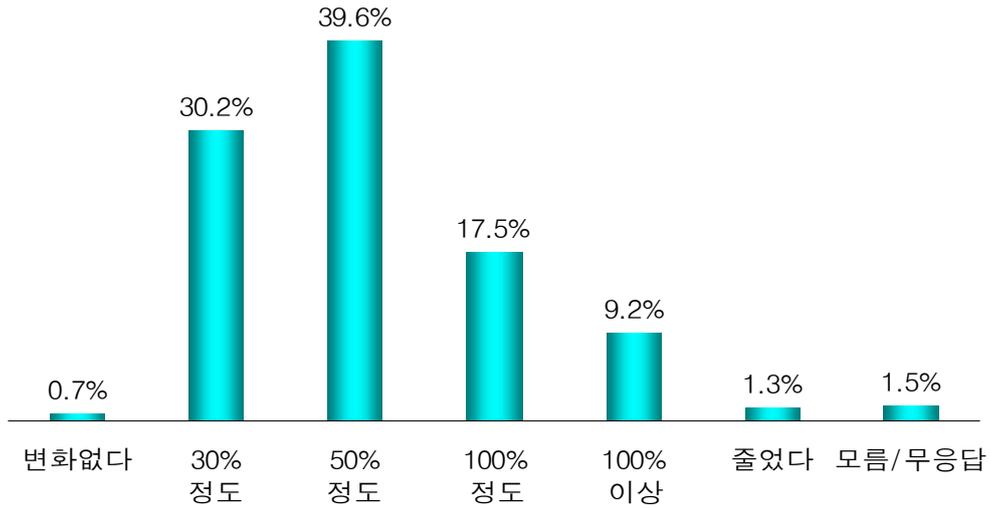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45	6.8
쉽진 않지만 노력하면 될 것 같다	356	53.4
노력하면 가능성 있다 (소계)	401	60.2
모르겠다	105	15.8
노력해도 어렵다	125	18.8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28	4.2
노력해도 가능성이 없다 (소계)	153	23.0
모름/무응답	7	1.1
합계	666	100.0

2.7. 농가 96.5%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농비 30% 이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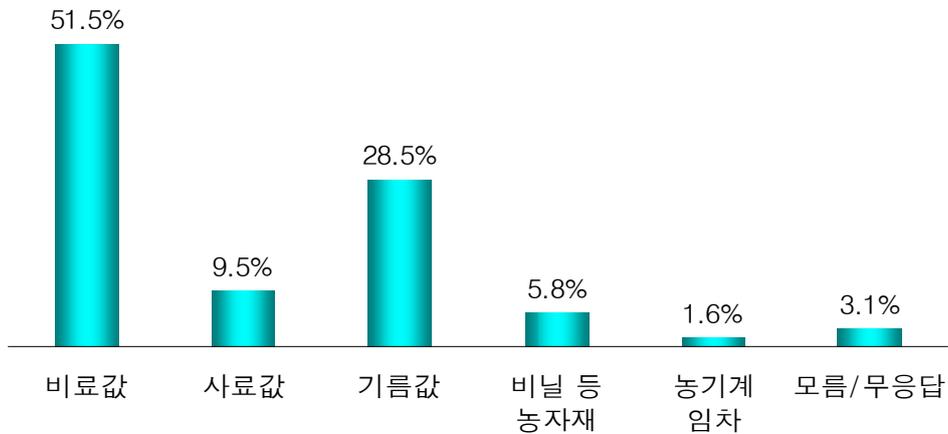
-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등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농 생산비 변화에 대해 69.8%가 1년 전에 비해 30~50% 정도 생산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100% 정도와 100% 이상 증가했다는 농가도 26.7%에 달했음.
- 그 외에도 ‘변화없다’는 응답이 0.7%, ‘줄었다’는 1.3%로 나타나 1년 전에 비해 거의 대부분의 농가(96.5%)의 영농 생산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2-8.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최근 1년간의 생산비 변화(농업인)



-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비료값(51.5%), 기름값(28.5%), 사료값(9.5%), 비닐 등 농자재(5.8%), 농기계 임차(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우선 지원책(농업인)



- 또한 영농생산비 증가에 대응해 ‘재배작목을 축소했다’는 농가가 35.4%, ‘작목을 전환했다’ 20.3%, ‘재배작목을 포기했다’ 11.1%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해 극복하고 있다’는 농가는 23.3%로 조사되었음.

표 2-18. 농자재값 상승 등의 영농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농업인)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재배작목 축소	236	35.4
재배작목 전환	135	20.3
재배작목 포기	74	11.1
에너지절감 대책 마련	155	23.3
기타	44	6.6
모름/무응답	22	3.3
합 계	666	100.0

3. 식품안전과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의식

- 농산물 소비자로서 도시민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농산물 구입 시 (외식 포함) 고려하는 구매 패턴, 수입식품 구입 의향, 원산지 표시제의 신뢰도, 친환경 농산물 구입 경험 등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판매 시 고려사항, 친환경농업의 실천여부, 기후온난화에 따른 농업생산 영향정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3.1. 친환경농업의 개념에 대한 이해 차이 도시민과 농업인 뚜렷해

- 친환경농업의 개념에 대해서 도시민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48.6%)이라고 응답하였음.
- 농업인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저투입농업’(62.8%)이라고 응답해 도시민과 농업인 간에 친환경농업의 개념에 대한 이해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9.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의 이해정도(도시민, 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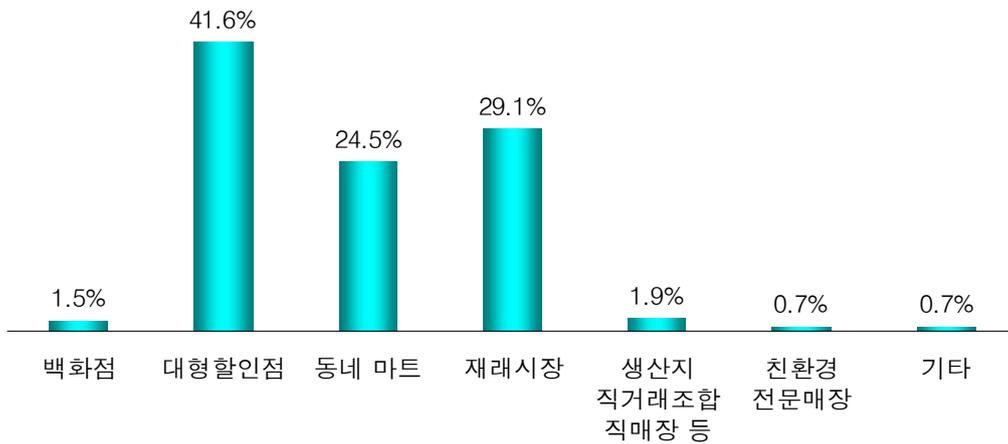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	733	48.6	69	10.4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저투입농업	494	32.8	418	62.8
환경을 건실하게 유지·보전하는 농업	130	8.6	119	17.9
우리 조상들이 즐겨 썼던 방식의 농업	96	6.4	46	6.9
잘 모르겠다	55	3.5	10	1.5
모름/무응답	-	-	4	0.6
합 계	1,508	100.0	666	100.0

3.2. 주된 식품 구입처는 ‘대형할인점’

- 식품의 주된 구입처를 물어본 결과, 41.6%가 ‘대형할인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재래시장’(29.1%), ‘동네마트’(24.5%) 순이었음.
- 식품구입처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본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대형할인점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10. 식품의 주된 구입처(도시민)



3.3. 도시민, 육류와 곡물 구입 시 ‘원산지’부터 확인한다

- 도시민들은 채소와 과일, 수산물, 외식 시에는 ‘품질(맛)’이 우선 선택 조건이라고 응답하였고, 특히 그 중 과일과 외식은 ‘품질(맛)’을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비율이 50%를 넘었음.
- 이에 비해 육류와 곡물은 ‘원산지’를 보고 구입한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조건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각 43.8%, 40.3%) 국산과 수입산 여부가 주요 구입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음.
- ‘안전성’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6개 조사 품목 모두 15.8~32.1%까지 높게 나타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20. 농축산물과 식품 구입 시 가장 우선하는 고려 사항(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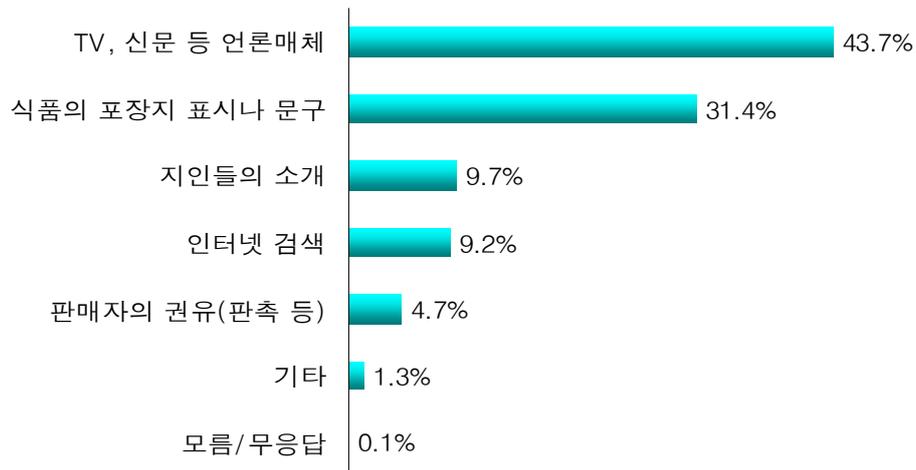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채소	육류	곡물	과일	수산물	외식
가격	9.1	7.9	8.1	6.5	7.1	14.9
안전성	32.1	23.6	19.4	18.1	26.7	15.8
품질(맛)	36.1	20.1	24.9	56.4	34.9	50.7
브랜드(인지도)	1.3	3.6	5.5	2.2	2.2	5.2
원산지(국산/수입)	19.4	43.8	40.3	16.0	28.2	9.8
기타(영양 등)	2.1	1.0	1.9	0.7	0.8	3.4
모름/무응답	-	-	0.1	-	0.1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4. 식품 정보는 주로 ‘TV, 신문 등 언론매체’ 에서 입수

- 식품에 대한 품질이나 관련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매체’라는 응답은 43.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식품의 포장지 표시나 문구’(31.4%)로 조사됨.
- 그 외에도 ‘지인들의 소개’(9.7%), ‘인터넷 검색’(9.2%), ‘판매자의 권유(판촉 등)’(4.7%)순으로 나타났음.
- 식품품질에 대한 정보경로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검색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보아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1. 식품 품질에 관한 정보경로(도시민)



3.5. 국산 농축산물 신뢰도 높지만, 안전성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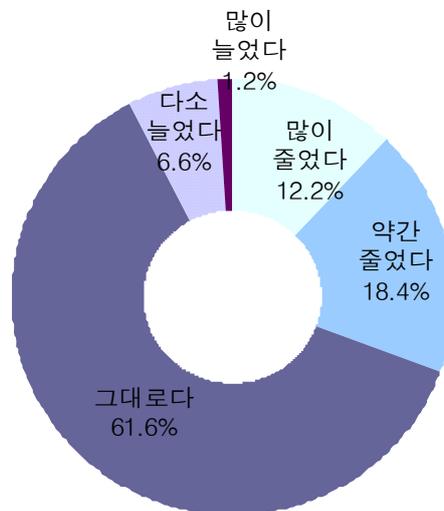
- 도시민에게 국산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정도를 물어본 결과, ‘신뢰한다’(매우 합산)는 의견이 55.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합산)는 응답은 8.8%에 그쳤음. ‘보통’이라고 평가를 유보한 도시민도 35.3%로 나타났음.
-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는 55.8%로 높은 편이지만, ’06년 조사결과(63.0%)에 비해 7.2%p 낮게 나타나 생산자의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 논란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의향이 없다는 완곡한 의견은 70.5%로 수입쌀(76.1%)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수입과일(33.2%)에 대한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3.7. 10명 중 3명 “쇠고기 협상 파동 이후 한우 소비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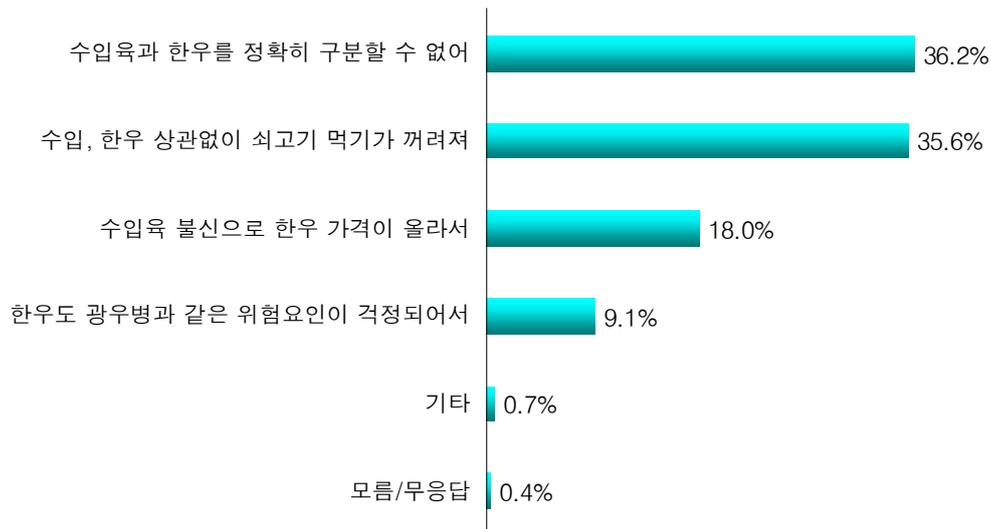
-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 이후 한우 소비가 ‘줄었다’는 응답이 30.6%로 나타났다, ‘늘었다’는 응답은 7.8%에 그쳐 소위 ‘광우병 소동’이 한우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 이후 한우소비량



- 한우 소비가 줄었다는 응답자(N=461)는 그 이유에 대해 ‘수입육과 한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서’(36.2%), ‘수입이든 한우든 상관없이 쇠고기 먹기가 꺼려져서’(35.6%) 등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2-13. 한우 소비를 줄인 이유(도시민)



3.8. 도시소비자 ‘원산지 표시’ 의존도 높아

-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8년 7월 8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시행 됨에 따라 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얼마나 확인하는지 살펴보았음.
- 식품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한다’(꼭 확인한다 합산)는 도시민 비율이 74.6%, ‘확인하지 않는다’는 18.8%로 나타나, 도시민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2-23).
- 원산지 표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45.4%가 ‘실효성이 있다’(매우 합산)고 응답했고, 21.4%가 ‘실효성이 없다’(전혀 합산)고 평가하였으며, 33.0%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여 평가를 유보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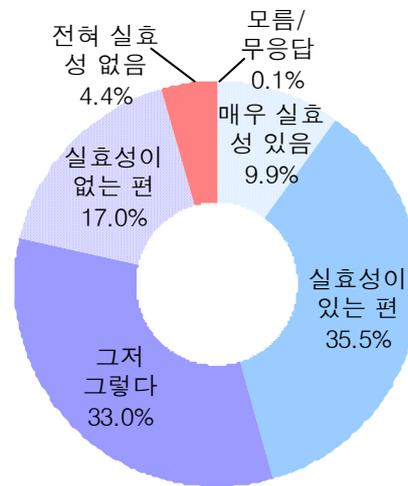
표 2-23. 식품구매 시 원산지 표시 확인 여부(도시민)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꼭 확인한다	432	28.6
확인하는 편이다	693	46.0
확인한다 (소계)	1,125	74.6
확인하지 않는다	284	18.8
음식 종류에 따라 다르다	98	6.5
모름/무응답	1	0.1
합 계	1,508	100.0

- 이같은 결과로 추후 원산지 표시제 강화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철저한 단속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4. 원산지표시제 강화 조치 평가(도시민)



3.9. 친환경 농산물 선호하지만 인증내용은 잘 몰라

-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8.5%로 나타났고, ‘없다’는 21.5%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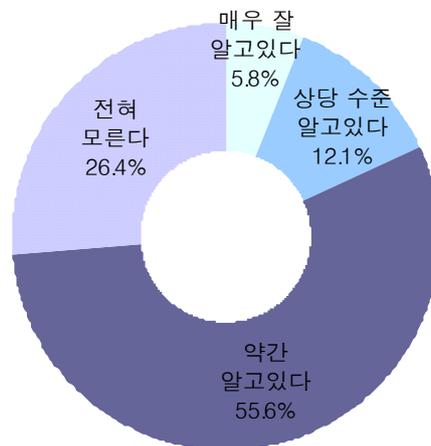
표 2-24. 친환경농산물 구입 경험여부(도시민)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있다	1,184	78.5
없다	324	21.5
합계	1,508	100.0

-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3단계(저농약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와 인증기준에 대해 ‘상당 수준 알고 있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17.9%에 그쳤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6.4%로 나타나 이해도가 낮은 편임.
- ‘약간 알고 있다’(55.6%)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산물 인증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5. 친환경농산물 인증 내용에 대한 인지와 이해정도(도시민)



3.10. 친환경농산물 구입의 주요동기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주요 동기를 살펴본 결과, ‘안전성·가족의 건강을 위해’(83.8%)를 1순위로, ‘영양가가 높을 것 같아서’(23.6%)를 2순위로 꼽았음.

표 2-25.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주요동기(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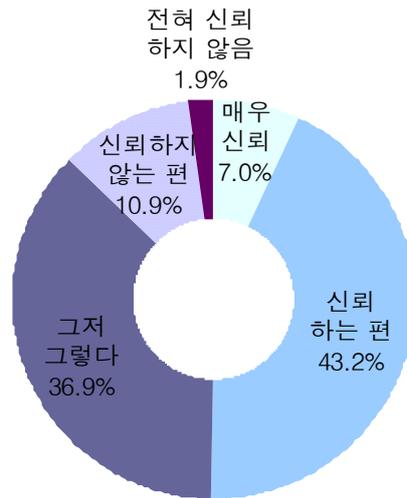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안전성·가족의 건강을 위해	1,263	83.8	133	8.8
판매자(판매처)에 대한 신뢰 때문에	73	4.8	223	14.8
환경보호를 위해	57	3.8	298	19.8
주변친지나 대중매체의 홍보와 추천 때문에	33	2.2	113	7.5
영양가가 높을 것 같아서	43	2.9	356	23.6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 때문에	21	1.4	162	10.7
생산자에 대한 신뢰 때문에	17	1.1	212	14.1
모름/무응답	1	0.1	11	0.7
합 계	1,508	100.0	1,508	100.0

3.11.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에 대해 50.2% ‘신뢰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의 신뢰정도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50.2%가 ‘인증마크를 신뢰한다’(매우 합산)고 응답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8%로 집계되었음.
- ‘신뢰한다’(매우 합산)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54.7%), 대학교 재학 이상(70.0%)에서 높게 나타났음.

그림 2-16.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정도(도시민)



3.12. 국산 유기농산물 신뢰도 78.1%, 수입산 1.8%

- 국산과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정도 비교에서 국산 유기농산물은 78.1%, 수입 유기농산물 신뢰도는 1.8%로 국산 유기농산물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음.
- ‘국산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음.

표 2-26. 국산과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정도(도시민)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국산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	1,178	78.1
수입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	27	1.8
모두 신뢰한다	78	5.2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120	8.0
잘 모르겠다	105	7.0
합계	1,508	100.0

3.13. 농업인, 농축산물 품목에 따라 출하전략 차별화

- 농업인이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할 때 채소와 곡물은 ‘가격’, 육류는 ‘안전성’, 과일은 ‘품질(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도시민의 구매조건을 반영하고 있음.
- 특히 ‘육류’에 대해 생산자 입장인 농업인들은 한-미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브랜드’, ‘포장상태’, ‘영양 등’에 대한 고려 정도는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표 2-27. 농축산물 생산·판매 시 우선 고려 사항(농업인)

단위: %

구분	채 소	육 류	곡 물	과 일
가격	42.8	26.0	52.3	25.7
안전성	29.9	30.0	18.4	11.6
품질(맛)	23.0	29.3	22.8	47.3
브랜드	1.3	11.0	3.9	4.9
포장상태	2.1	0.5	1.1	7.1
영양 등	1.0	3.3	1.6	3.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3.14. 대부분의 농업인 “국산 농축산물 훨씬 안전하다”

- 국산 농축산물과 수입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과반수 이상인 77.9%의 농업인이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음.
- ‘국산과 수입산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17.9%으로 나타났고, ‘수입산이 오히려 국산보다 안전성이 높다’는 의견은 2.1%로 집계되었음.

표 2-28. 국산과 수입 농축산물의 안전성 인식 수준(농업인)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국산과 수입산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	119	17.9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훨씬 안전하다	519	77.9
수입산이 오히려 국산보다 안전성이 높다	14	2.1
모름/무응답	14	2.1
합 계	666	100.0

3.15. 농산물 안전성 점수 '80점 이상' 78.1%

- 농업인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 안전성 점수에 대해 80-90점 이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90-100점이 30.5%로 집계되었음.
- 따라서 대부분의 농업인은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 80점 이상의 안전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9. 농업인 자신이 생각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점수(농업인)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90-100점	203	30.5
80-89점	317	47.6
70-79점	106	15.9
60-69점	25	3.8
60점 미만	12	1.8
모름/무응답	3	0.4
합 계	666	100.00

3.16. 소득 감소 우려해 친환경농업 실천 기피

- 현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실천하고 있다'고 대답한 농가는 42.3%, '조만간 실천한 예정이다' 24.9%,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28.4%로 나타났음.

-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60세 미만 계층과 시설원예(60.4%)와 과수(58.2%)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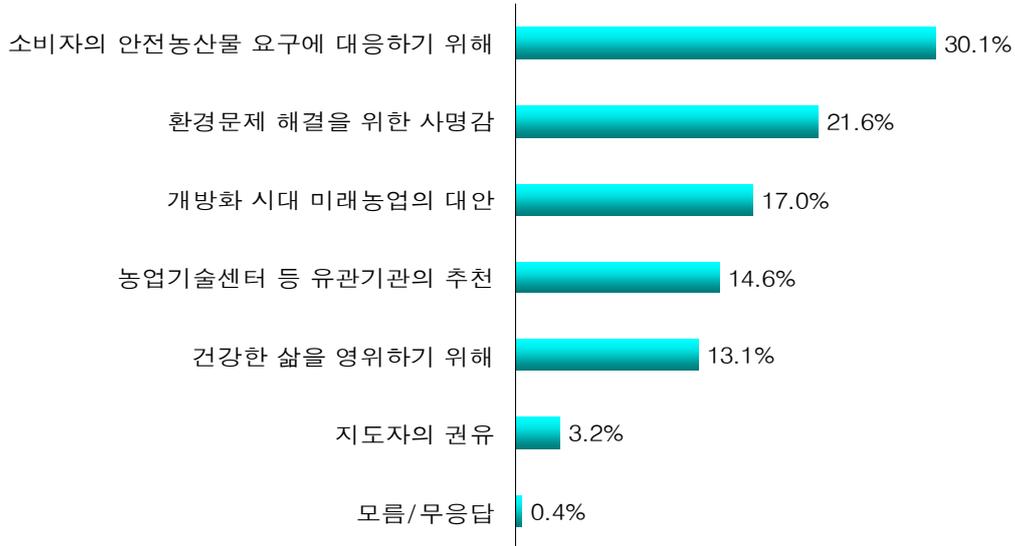
표 2-30.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농업인)

단위: 명, %

	실천하고 있다		실천하고 있지 않다		조만간 실천할 예정이다		모름/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별									
60세 미만	99	51.0	49	25.3	43	22.2	3	1.5	194
60세 이상	153	37.8	119	29.4	111	27.4	22	5.4	405
모름/무응답	30	44.8	21	31.3	12	17.9	4	6.0	67
주재배작목									
수도작	112	36.6	94	30.7	84	27.5	16	5.2	306
과수	53	58.2	13	14.3	21	23.1	4	4.4	91
노지채소	13	36.1	9	25.0	14	38.9	.	.	36
축산	20	38.5	14	26.9	14	26.9	4	7.7	52
시설원예	32	60.4	12	22.6	9	17.0	.	.	53
특작	17	36.2	21	44.7	8	17.0	1	2.1	47
기타	5	35.7	5	35.7	4	28.6	.	.	14
모름/무응답	30	44.8	21	31.3	12	17.9	4	6.0	67
합계	282	42.3	189	28.4	166	24.9	29	4.4	666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N=282)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도입 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30.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명감’(21.6%)을 가장 많이 꼽았음.
- 그 다음으로 ‘개방화 시대 미래농업의 대안’(17.0%),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14.6%),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7. 친환경농업 도입 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농업인)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농가(N=189)는 그 이유로 ‘소득감소가 우려되고 불확실하다’(36.5%), ‘관행농법에 익숙하여 전환하기가 어렵다’(30.2%)를 꼽았으나, 26.4%는 기술과 자재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어 기술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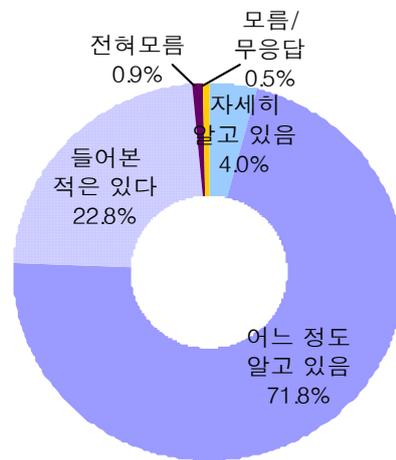
그림 2-18.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농업인)



3.17. 농업인 10명 중 7명은 “기후변화 우려”

- 농업인들이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자세히 합산)가 75.8%로 과반수 이상 차지하였고, ‘들어본 적은 있다’ 22.8%, ‘전혀 모른다’ 0.9%로 나타났다.

그림 2-19.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인식정도(농업인)



- 기후온난화가 농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상당히, 다소 합산)는 의견에 과반수 이상인 72.0%가 동의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다소 합산)는 18.1%에 그쳐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기후온난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표 2-31. 기후온난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농업인)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76	26.4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04	45.6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계)	480	72.0
보통이다	53	8.0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89	13.5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	31	4.6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계)	120	18.1
모름/무응답	13	1.9
합 계	666	100.0

4. 농촌복지와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 거주환경의 만족도 및 전반적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도시민에게는 농촌 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추가로 질문하였고, 농업인에게는 농촌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하여 질문하였음.

4.1. 거주환경과 삶의 질 만족도 도-농간 ‘뚜렷한 격차’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 농업인 30.0%, 도시민 49.8%가 ‘만족한다’(매우 포함)고 응답해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해 19.8%p의 도-농간 격차를 보였음.
-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도시민과 농업인, 각각 10.6%p, 4.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2.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08년 KREI		'06년 KREI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매우 만족	7.0	2.1	2.8	2.8
만족하는 편	42.8	27.9	36.4	22.6
만족 (소계)	49.8	30.0	39.2	25.4
보통	39.3	53.5	46.7	54.5
불만족하는 편	10.0	13.5	13.1	14.4
매우 불만족	0.9	2.0	1.1	2.7
불만족 (소계)	10.9	15.5	14.2	17.1
모름/무응답	-	1.0	-	3.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현재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도 농업인의 13.1%가 삶의 질이 '높다'(매우 합산)고 인식해 도시민의 19.3%에 비해 6.2%p 차이를 보였음.
-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의견은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도시민과 농업인, 각각 4.5%p, 3.8%p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3. 현재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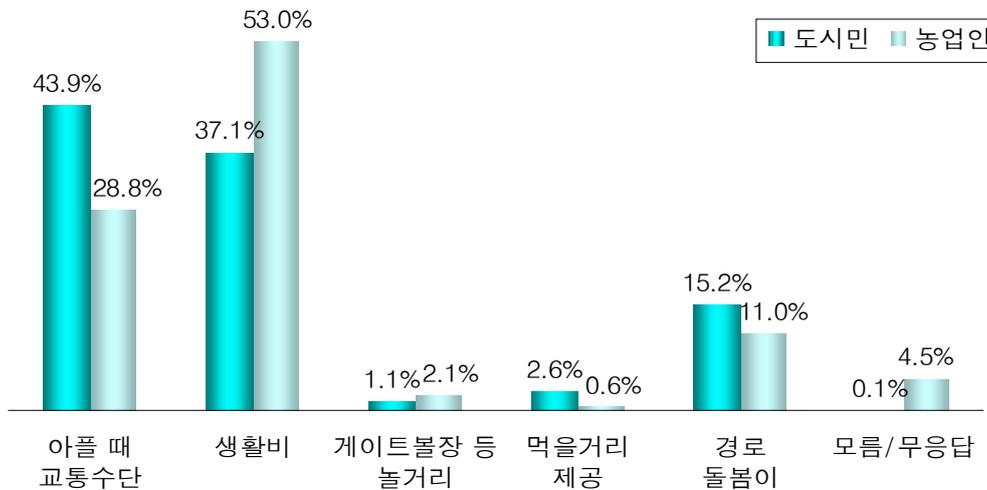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08년 KREI		'06년 KREI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매우 높다	2.6	0.6	0.2	0.7
높은 편	16.7	12.5	14.6	8.6
높다 (소계)	19.3	13.1	14.8	9.3
보통	70.2	60.2	70.9	56.6
낮은 편	9.3	22.8	13.3	29.1
매우 낮다	1.2	2.4	0.9	1.3
낮다 (소계)	10.5	25.2	14.2	30.4
모름/무응답	0.1	1.5	0.1	3.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2. 고령농민을 위해 ‘생활비’, ‘아플 때 교통수단’ 지원 필요

- 농촌지역에서 고령농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물어본 결과, 도시민과 농업인은 ‘아플 때 교통수단’(각각 43.9%, 28.8%)과 ‘생활비’(각각 37.1%, 53.0%)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꼽았음.
- 특히, ‘아플 때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 교통,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2-20. 고령농을 위한 우선 지원책(1순위 중심)



4.3. 대다수의 도시민 농촌복지 예산 증대에 긍정적

-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특별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도시민 85.6% ‘매우 필요’,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4%에 그쳤음. 12.0%는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여 정확한 의사를 밝히진 않았음.

표 2-34. 농촌의 특별 복지정책의 필요성(도시민)

단위: 명, %

구 분	'08년 KREI		'06년 KREI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필요하다	482	32.0	312	20.8
다소 필요하다	809	53.6	986	65.7
필요하다 (소계)	1,291	85.6	1,298	86.5
보통이다	181	12.0	171	11.4
별로 필요하지 않다	30	2.0	24	1.6
전혀 필요하지 않다	6	0.4	6	0.4
필요하지 않다 (소계)	36	2.4	30	2.0
모름/무응답	-	-	1	0.1
합 계	1,508	100.0	1,500	100.0

- 농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73.3%가 찬성했고, 반대는 3.9%에 그쳐 높은 지지도를 보였으나, 찬성비율은 '06년 조사결과보다 2.1%p 소폭 하락하였음.
- '찬성한다'(매우 합산)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74.5%), 40대(77.7%), 농촌거주유경험자(77.9%), 농업인 가족(78.3%)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5.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증대에 관한 견해(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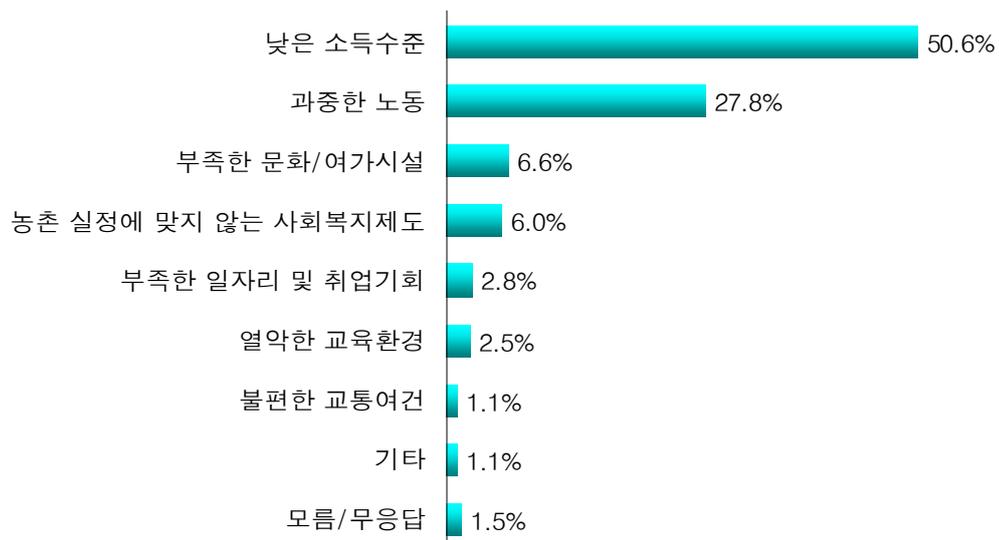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08년 KREI		'06년 KREI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찬성	304	20.2	193	12.9
찬성하는 편	800	53.1	938	62.5
찬성 (소계)	1,104	73.3	1,131	75.4
보통	343	22.7	319	21.3
반대하는 편	48	3.2	46	3.1
매우 반대	10	0.7	4	0.3
반대 (소계)	58	3.9	50	3.4
모름/무응답	3	0.2	-	-
합 계	1,508	100.0	1,500	100.0

4.4. 농촌생활의 어려움 ‘낮은 소득’과 ‘과중한 노동’이 주요인

- 농업인은 농촌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낮은 소득수준’(50.6%), ‘과중한 노동’(27.8%), ‘부족한 문화/여가시설’(6.6%)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으며, ‘농촌 실정에 맞지 않는 사회복지제도’(6.0%), ‘부족한 일자리 및 취업기회’(2.8%) 등의 의견도 제시하였음.

그림 2-21. 농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농업인)



4.5.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건강증진 시설 확충’ 해야

-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농촌주민의 교육과 건강증진 시설 확충’(28.1%),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27.8%)를 대표적으로 꼽았음.
- 그 다음으로 ‘농촌지역 주택 보급, 개량’(10.2%), ‘농촌지역 자연환경 보호’(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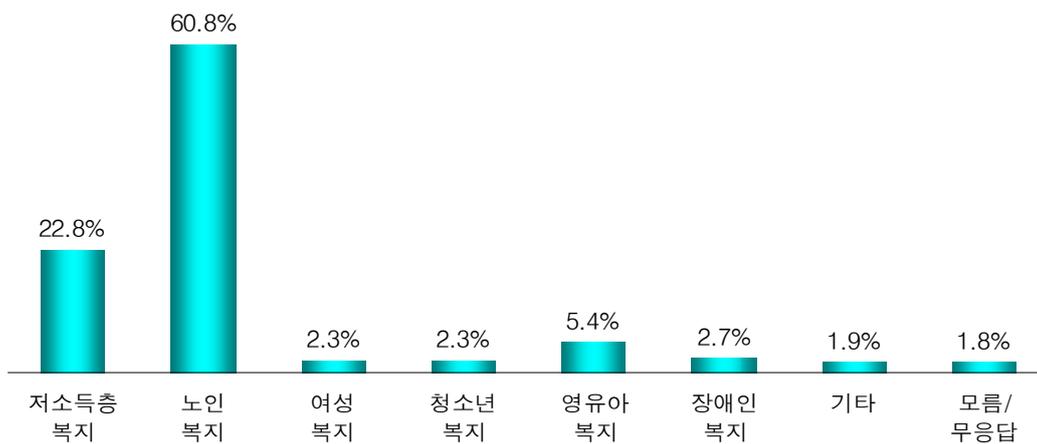
표 2-36.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추진 정책(농업인)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농촌지역 자연환경 보호	61	9.2
농촌지역 주택 보급, 개량	68	10.2
공용버스 등 농촌지역 교통수단 확충	37	5.6
농촌주민의 교육과 건강 증진 시설 확충	187	28.1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	185	27.8
도시 수준의 문화시설 제공	58	8.7
농촌지역의 지방자치 증진	36	5.4
기타	23	3.5
모름/무응답	11	1.6
합 계	666	100.0

- 정부에서 농촌주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 분야로 대부분의 농업인은 ‘노인복지’(60.8%)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저소득층 복지’(22.8%)라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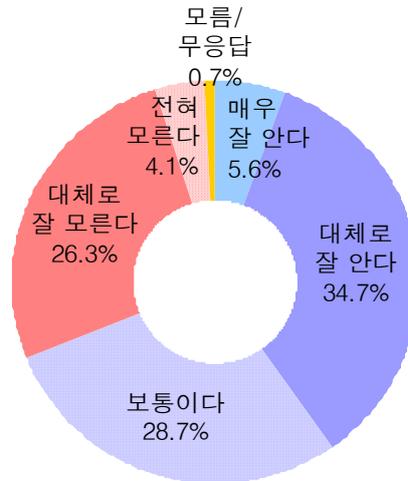
그림 2-22.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복지 분야(농업인)



4.6.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잘 안다’ 40.3%에 그쳐

-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잘 안다’(매우, 대체로 합산)는 응답은 40.3%, ‘잘 모른다’(대체로, 전혀 합산)는 응답은 30.4%로 나타나 추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인식정도(농업인)



- 또한,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간병, 수발, 가사지원, 복구용구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5.6%, ‘없다’는 93.2%로 나타나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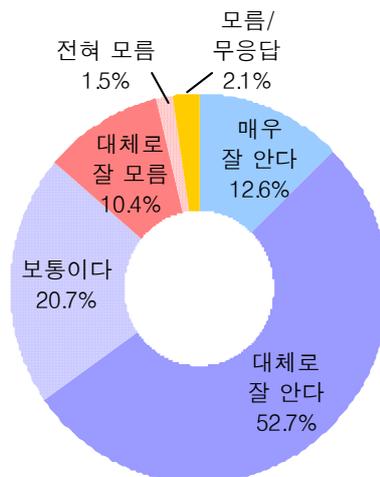
표 2-3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수여 여부(농업인)

구분	빈도	비율
있다	37	5.6
없다	621	93.2
모름/무응답	8	1.2
합계	666	100.0

4.7. 농업인 65.3%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잘 안다’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았음.
-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잘 안다’(매우, 대체로 합산)는 응답은 과반수 이상인 65.3%, ‘모른다’(대체로, 전혀 합산)는 11.9%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20.7%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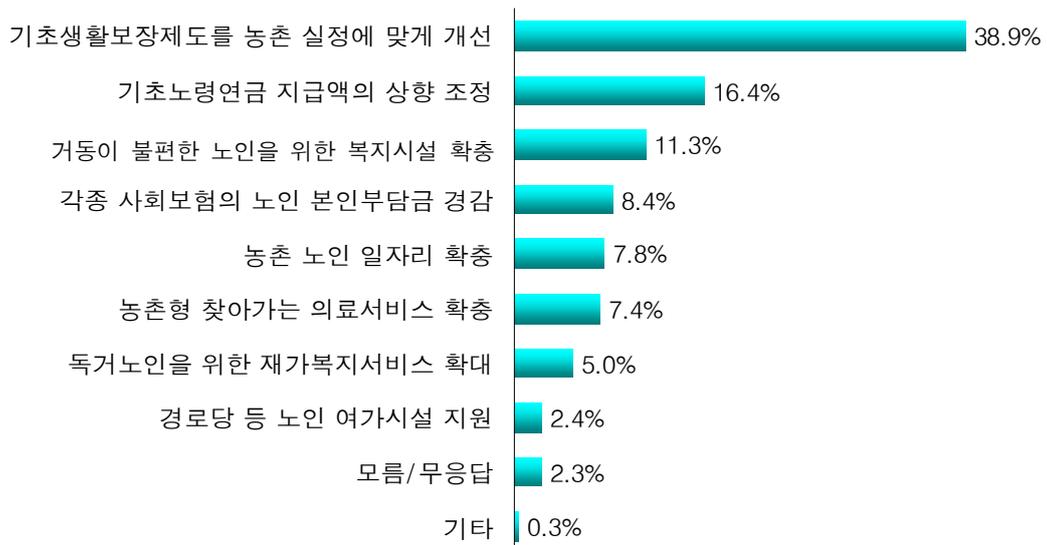
그림 2-24.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식정도(농업인)



4.8. 기초 생활보장제도 농촌실정에 맞게 개선 절실

- 농업인들은 농촌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선진복지 정책으로 ‘농촌 실정에 맞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38.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상향조정’(16.4%),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11.3%) 등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2-25. 가장 우선적으로 수립 또는 개선해야 할 선진복지정책(농업인)



제 3 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 도시민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음.
- 도시민과 농업인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은 그 어느 해보다 활발히 제기 되었으며, 각 현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었음.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1.1. 개황

- 자유의견란을 통해 제시된 도시민과 농업인의 농업정책 건의와 농업·농촌에 대한 의견을 분야별로 정리한 결과 도시민 863건, 농업인 405건으로 집계되었음.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산물 유통, 가격’(각각 305건, 78건)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음.
- 다음으로 도시민은 ‘농업정책 전반’(106건), ‘농산물 안전성’(104건), ‘농촌

지역개발, 복지'(104건), '농촌인력, 후계인력'(92건), '영농자금, 농가부채'(68건) 등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농업인은 '농업정책 전반'(68건), '영농자재'(64건), '영농자금, 농가부채'(53건), '농촌인력, 후계인력'(42건), '쌀산업 정책'(32건)' 등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건의사항 전문은 부록 1을 참조.

표 3-1. 농정건의 요지 집계(도시민 863건, 농업인 405건)

단위: 명

분 야	구분	건수	요 지
농업정책 전반	도시민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산물을 개발하여 지역발전과 농민 소득을 향상시키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촌을 살렸으면
	농업인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인 안목으로 책임감 있는 농업정책을 실시해주길 농업인의 의욕을 증진시킬 농업정책 필요
농촌관광	도시민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민들도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농촌관광으로 농촌 소득을 올려주길
농산물 유통, 가격	도시민	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 농민들과의 직거래 확대
	농업인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가격의 최저 가격보장제 실시 요망 농산물 유통 개혁 노력 필요
농산물 안전성	도시민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약 검출 기준 강화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주길
농촌 자연환경	도시민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개발을 하되, 자연환경 파괴되지 않길 자연환경을 관리하여 휴양지로 조성해주길
농업개방 국제협상	도시민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기 협상 문제 제대로 해결해주길 수입농산물은 최소화하고 국내 농산물을 확대해주길
	농업인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미래지향적인 고품질 농산물로 개방에 대처해야
쌀산업 정책	도시민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 자급자족을 늘릴 수 있는 정책 필요 우리의 주식인 쌀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야
	농업인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산업 정책을 일관성있게 지속해주길 현 농촌실정에 맞는 수매가격 설정

분 야	구분	건수	요 지
영농자금, 농가부채	도시민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자금 저리 대출 •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
	농업인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자금 확대지원과 농가부채 경감 대책 필요 • 농가부채 장기저금리로 해주길 요망
농촌인력, 후계인력	도시민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사람들의 농촌 이주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 • 농촌 인력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정책 필요
	농업인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농촌인력 지원 방안을 확대해주길 •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농지정책	도시민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들도 농지 구입이 가능토록 해주길 • 농지 전용 허가 시 투기 수단이 되지 않길
	농업인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용도 공장 신축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 요망 • 도시민들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필요
영농자재	농업인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확대 지원 요망 • 면세유 계속 지원 필요
농업기관	도시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생, 다품종 개발을 위한 농업전문연구개발센터 필요
	농업인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도를 위한 지방의 농촌 지도기관 확충 절실
농촌 지역개발, 복지	도시민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병원 등의 많은 복지시설 확대 • 농촌 고령 노인들을 위한 최저 생활 보장
	농업인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현실에 맞게 실시해주길 • 노인 복지 요양시설 확충 요망
영농환경개선	농업인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로확장 및 포장 시급 •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조성
기타	도시민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브랜드 개발 및 판매가 가능토록 •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 표시 규제를 확실하게 해주길
	농업인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부족 위기 해소를 위해 쌀 품종개발 필요 • 친환경 농법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요망

2.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 도시민과 농업인의 농업정책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민들은 농가소득과

농산물 가격,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과 농업관련 교육 강화 등에 관심이 많았으며, 농업인은 농업정책, 영농자재,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 건의가 많았음.

- 도시민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농업·농촌 정책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주장했고, 농업인들은 농업정책이 일관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사기 및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산물 유통, 가격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 도시민은 농산물 유통을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한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였음. 농업인은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 안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의가 많았음.
-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도시민들은 농산물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농산물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농업인들은 고품질 농산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처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음. 쌀산업 정책에 대해서 도시민은 우리 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농업인들은 현 실정에 맞는 수매가격을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 농가부채에 대해서 도시민들은 농업인들이 부담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농업인들은 영농자금 확대지원과 장기저리융자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함. 농지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이나 농업인 모두 농지거래 규제와 양도소득세 부과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이밖에, 농촌관광에 대해서는 도시민들이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농산물 안전성에 대하여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 표기를 명확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음. 농촌지역 문화시설과 복지확대에 대한 의견도 다수 있었음.

제 4 장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시민 1,508명과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666건 회수) 각각 면접조사와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주요 조사 내용은 새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 농업·농촌가치 인식, 농산물 안전성 인식과 소비패턴 변화, 농업인 의식변화 등임.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할 농업정책 1순위는 ‘시장개방 대책’

- 도시민들은 새정부가 역점 추진해야할 정책 1순위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근본대책’(28.1%)과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17.4%)를 꼽았음.
- 농업인들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근본대책’을 1순위로 꼽았고 그 비율도 도시민보다 훨씬 높은 47.7%였으며, 다음으로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18.2%)을 꼽아 도시민과 정책 수요의 차이를 보였음.

- 평소 농업정책을 포함해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도시민은 과반수가 넘는 55.1%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는 1순위로 ‘농식품 안전성’(26.7%), 다음으로 ‘농촌복지와 지역개발’(21.1%)로 응답하였음.
- 수출농업 추진에 대해 ‘노력하면 가능성 있다’는 견해가 과반수가 넘는 60.2%, ‘노력해도 가능성이 없다’는 23.0%로 나타나 긍정적인 견해가 우세함.

농가 96.5%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농비 30% 이상 상승”

-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변화에 대해 69.8%가 1년 전에 비해 30~50%의 생산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100% 정도와 100% 이상 증가했다는 농가도 26.7%에 달해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서 생산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생산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배작목을 축소했다는 농가가 35.4%, 작목을 전환했다는 농가가 20.3%, 재배를 포기한 농가가 11.1%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해 극복하고 있다는 농가는 23.3%로 조사됨.

도시민 55.8% “국산 농축산물 안전성 신뢰 한다”

- 도시민들은 채소와 과일, 수산물, 외식 시에는 ‘품질과 맛’이 선택의 우선 조건이라고 응답하였고, 육류와 곡물은 ‘원산지’를 보고 구입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안전성’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6개 품목 모두 15.8~32.1%까지 높게 나타남.

- 도시민 55.8%가 ‘국산농산물 안전성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8%에 그쳐 높은 신뢰도를 보임.
- 농업인은 수입농산물에 비해 국산이 훨씬 안전하다는 응답이 77.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 30.5%는 90점 이상으로, 47.6%는 80점~89점으로 평가함.
-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는 농업인은 42.3%, 실천할 예정이라는 농가는 24.9%로 나타남. 친환경농업 도입 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과 ‘환경문제 해결’을 꼽았음.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28.5%의 농가는 그 이유로 ‘소득감소 우려’(36.5%), ‘관행농법에 익숙해 전환이 어려움’(30.2%)을 꼽았으나, 26.4%는 기술과 자재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어 기술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수입쌀과 미국산 쇠고기 구매의향 낮아

- 수입식품 구입 의향에 대해 수입쌀 6.2%, 미국산 쇠고기 10.6%, 호주산 쇠고기 19.0%, 수입과일 21.4%, 수입 가공식품 14.5% 등으로 나타남.
- 논란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70.5%로 수입쌀(76.1%)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쇠고기 협상 파동 이후 한우 소비가 ‘줄었다’는 응답이 30.6%로 나타났고, ‘늘었다’는 응답은 7.8%에 그쳐 한우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한우 소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수입육과 한우를 구분할 수 없어

서’(36.2%), ‘쇠고기 먹기가 꺼려져서’(35.6%) 등으로 응답함.

- 식품구입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한다는 응답은 74.6%로 높게 나타났고, 원산지 표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45.4%가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1.4%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함. 33.0%는 평가를 유보하였음.

도시민 78.5% “친환경농산물 구입한 적 있다”

- 도시민의 78.5%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으며, 그 이유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83.8%)를 1순위로, ‘영양가가 높을것 같아서’(23.6%)를 2순위로 꼽았음.
- 반면, 높은 관심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는 낮은 편으로 인증단계 를 ‘상당수준 알고 있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17.9%에 그쳤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6.4%로 나타나 이해도가 낮은 편임.

농촌생활의 어려움 ‘낮은 소득’과 ‘과중한 노동’이 주 요인

- 농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많은 농업인이 ‘낮은 소득’(50.6%), ‘과중한 노동’(27.8%), ‘부족한 문화시설’(6.6%)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으며, 농촌 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농촌주민의 교육과 건강 증진 시설 확충’(28.1%), ‘농촌지역 사업체에 투자확대’(27.8%)를 대표적으로 꼽았음.
- 농업인 30.0%가 현재 거주 여건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시민은 49.8%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19.8%p의 도-농 격차를 보였음.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도 농업인의 13.1%가 삶의 질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해 도시민의 19.3%에 비해 6.2%p 차이를 보였음.

-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주거환경 및 삶의 질 만족도가 10% 미만에서 상승하였음.
- 농촌지역에 ‘특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도시민은 85.6%로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4%에 그쳤음.
- 농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73.3%가 찬성하였고, 반대는 3.9%에 그쳐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으나 찬성비율은 '06년 조사결과보다 2.1%p 소폭 하락함.

도시민 93.8% “농업·농촌 앞으로도 중요할 것”

- 농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도시민의 인식 비율은 93.8%로 4년 전에 비해 낮아졌지만 2년전보다는 5.4%p 증가해 여전히 중요성 인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 도시민들은 현재나 미래의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 1순위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2순위는 ‘자연환경 보전’을 꼽았음.
- 단, 미래에는 위와 같은 농촌의 역할이 현재보다는 다소 감소하고 ‘전원생활 공간’과 ‘국토균형 발전’ 역할의 중요성 인식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10년 후 농촌생활이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으로 전망한 도시민의 비율은 '06년 33.5%, '08년 29.4%로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농업인들의 긍정적인 전망은 18.0% 그쳐 도시민과 차이를 보였음.
- 농업인 22.7%는 현재 농촌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한다’는

36.8%의 농업인 중 53.4%가 생활환경과 의료시설 등 복지 미흡을 이유로 꼽았음. 교육여건도 10.2%로 꼽았음.

도시민 62.8% “향후 농촌에 거주할 의향있다”

- 농촌거주 의향은 62.8%가 매우 많거나 조금 있다고 응답했고, 거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81.4%가 ‘10년 후 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해 실제 귀농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함. 2008년 도시민의 농촌거주 의향은 '06년 조사결과(71.3%)보다 8.5%p 감소하였음.
- 도시민 63.4%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익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에는 40.5%가 찬성해 2006년 52.8%에 비해 지지도가 약화되는 추세임.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장개방은 안 된다’거나 ‘수입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농업보호 의식도 지난해와 비슷한 60.4% 수준에 그쳐 하락추세에 있음.

“곡물자급률 훨씬 높여야” 2006년 비해 12.2%p 증가

- 곡물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2006년 59.5%까지 하락했으나 2008년 들어 국제곡물가격 급등과 식량자급률에 대한 중요성이 홍보되면서 곡물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71.7%까지 상승함.
-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과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하겠다는 도시민이 41.9%로 가장 많고,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도 19.4%로 도시민의 61.3%는 실리를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반면,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도 시민은 38.0%에 그쳤으나 '06년 조사결과 보다는 2%p 상승하였음.

농업종사 만족도 22.2%로 꾸준한 상승세

- UR 출범 이후 등락을 거듭해 오던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2002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반전해 2008년도에도 22.2%로 20%대를 유지하고 있음.
-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43.6%의 농업인은 불만요인으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44.8%)와 ‘수입개방으로 장래불안’(24.8%)을 가장 많이 꼽았음.
- 자녀에게 영농을 ‘승계할 의향이 있다’는 농업인은 8.0%에 그쳤고, ‘승계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8.4%, ‘결정하지 않았다’는 33.2%로 나타나 영농 승계 의지가 약함.
- 영농을 자녀에게 승계할 의향이 없다는 농업인은 은퇴 후 농지를 매각(21.1%), 임대(27.5%)할 계획이라고 응답했고,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9.3%로 나타남.

2. 시사점

- 새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실시한 이번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농업인과 도시민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식품 안전,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식량 자급 문제 등에 민감한 반응하였으며, 이같은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같은 영향으로 국민들은 중요 농업정책 1순위로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을 꼽아 새정부 출범직전 주문과 일치하였음. 그만큼 국민들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우려할 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하고 있었음.
- 도시민들의 수입쌀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구매 기피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고, 한-미 쇠고기협상 파동 이후 한우 소비가 줄었다는 도시민이 10명 중 3명으로 나타나 한우 안전성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함.
- 도시민 45.4%가 원산지표시제 강화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고 인식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도시민의 78.5%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농가가 28.4%에 이르고 이들 농가는 그 이유를 기술과 자재확보 어려움 등으로 들고 있어 기술지도 등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최근 1년새 농자재 가격이 급속히 상승하여 생산비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농가가 96.5%에 달했고, 이들 농가들은 재배면적 축소 또는 작목 전환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됨.
- 10년 후 농촌생활 전망은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긍정 비율이 매년 낮아져 각 29.4%, 18.0%에 그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농업·농촌 공익가치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감소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농업·농촌의 비전제시와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거주환경과 삶의 질 만족도에서 도-농 격차는 여전히 높아 각 19.8%p, 6.2%p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은 농촌생활여건과 복지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화’를 꼽아 새정부 농촌복지정책에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야 할 것임.

- 이런 가운데서도 식량자급도를 훨씬 높여야 한다는 도시민이 전년 대비 12.2%p나 증가하고, 10명 중 6명 이상이 향후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문제 해결에 도시민의 동참과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일정 부분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 지난 2006년 이후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서 소비자인 도시민은 농업·농촌의 안전한 식품 공급과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유지되고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고, 농업인은 개방피해 대책과 고령농업인 대책, 교육 등 주거여건 확충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중요성과 가치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직접 지원 의지는 약화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농업·농촌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정책으로 연결시켜주는 전략이 필요함.

부 록 1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책 건의 전문⁴⁾

1. 도시민 분야별 건의사항

① 농업정책

- 농업의 세계적 경쟁력 향상
- 농업 정책을 잘 하도록
- FTA 반대만이 아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자생력 향상
- 향후 국가 안보차원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 필요
- 농업 정책을 국민과 농민을 위해 펼칠 것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촌 살렸으면
- 발전할 수 있게 정부에서 해야 함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 귀농할 수 있게
- 농민의 편한 생활을 위한 농업 정책
- 합리적으로 정책
- 농촌을 잘 살게 했으면
- 카드제로 이자 없이 생활필수품을 사도록 보조
- 정부에서 수입 자제
- 현재 수준의 식량 자급을 유지 필요
-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해서 수입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4) 정책건의 전문은 도시민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하나로 정리하여 게재하였으며, 농업인 정책건의 내용은 문구 수정 등을 거쳐 전문을 게재함.

-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로를 정부에서 뒷받침 했으면
-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라는 인식 절실함
- 무조건 빌려주고 빚만 늘리지 말았으면
- 직거래를 실시해 중간 마진 없이 싸게 살 수 있게
- 지역 특산물 개발해서 맛, 질 높이면 지역 발전과 농민 소득이 같이 이루어짐
- 농촌 교육 강화
- 귀농 시 농사짓는 법을 정책으로 잘 갖추었으면
- 유기농 활성화
- 전문 인력 양성
- 농산물 가격 안정화
-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정책 뒷받침
- 수입이 보장되는 농촌 생활
- 국가는 국민 먹거리를 영구적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국가 시책으로 농업 보호, 육성
- 곡물 구매 시 가격 조정
- 100년을 내다보는 농업 정책이 되었으면
- 지원보다 새로운 물품 개발
-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보조 해주어야
- 일관성 있는 정책 요망
- 여론조사 등을 통한 여러 의견이 바탕이 된 정책 수립
- 세금 증가 통한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 농기계 비싸다
- 유기농법에 대한 교육 홍보 지원 필요
- 현실에 맞게 정책 펼쳤으면
- 수입 개방에 맞서 품질 개증
- 정부에서 소규모 농가를 경쟁력 없다고 모든 분야에서 축소시키는 현실 개선
- 교육이 문제다
- 세금을 더 걷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
- 효과적인 제도 적용해 꾸준히 실행

- 기술적인 면 부족함으로 제공
- 농업 정책을 바로 해야 가격이 안정되고 농가 부채와 농촌 살림이 부강하게 됨
- 농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 수출·수입이 동등하게, 수출이 월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시골이 고령화되어 일할 사람이 없음

② 농촌관광

-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
- 농촌 상품 개발
- 도시 사람들이 많이 찾았으면
- 도심에 사는 시민들 농촌 체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농촌 관광 계기로 농업인들 노고 알기
- 농촌 관광으로 농촌 소득 올려주길
- 한우를 생산자와 직거래로 유통
- 농촌 관광 시 농사철을 피하고 농민들 배려

③ 농산물 유통, 가격

- 농산물 유통을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한 가격 받을 수 있게
- 농산물 유통 과정을 연구해 적당한 값 받을 수 있게
- 유통 간소화
-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명시
- 국가에서 농부들을 위해 가격 정책을 보장
- 생산 가격의 급등락 없이 안정적인 생활됐으면
- 유통 과정의 문제
-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
-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생산자에 비해 중간 상인의 마진 높다
- 농산물 출하 가격과 시장 판매 가격의 차이 개선
- 중간 상인들이 폭리 취하는 것 개선

- 농민들과의 직거래 확대
- 생산 유통 단가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 비용 절감으로, 생산자 중심 이윤 극대화
- 농민들에 대한 대형 마트의 가격 횡포 법적 제한
- 경제적 지원
- 불필요한 유통 과정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못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것
- 중간 마진 없었으면
- 농민 소득 보장
- 가격 폭등·폭락 방지하기 위해 재배 면적 등 생산량을 계획적으로
- 수입 농산물 조정해서 농가 수입에 신경쓸 것
- 유통 가격을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서 직거래
- 유통 마진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성 있는 정책 마련
- 생산자와 소비자의 최대 이윤 보장을 위한 중간 유통 구조 혁신 정책
- 해마다 달라지는 농산물 안정 정책
-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 안전하게 공급
- 친환경 인증 마크 믿을 수 없으니 단속 강화
- 획기적인 유통 구조 개선
- 친환경 제품으로 소득 높였으면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유지
-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가격
- 산지처럼 싸게 소비자에게 제공
- 쇠고기 가격 안정
- TV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유통 구조 개선
- 유통의 안정화

④ 농산물 안전성

- 농약 제초제 등 과다 사용
- 중거래와 상거래를 철저히 단속
- 국산품 표시해도 신뢰가지 않음

- 적절한 가격을 받더라도 믿을 수 있는 식품 조달할 수 있게
- 국민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면
- 소매상들을 믿을 수 없다
-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게
- 농산물에 원산지 포함 생산자, 유통 경로 명확히 기재
-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 농산물 유통 생산 과정의 안정성 향상
- 가격과 직거래 유통으로 농민에게 보탬될 수 있게
- 수입 농산물 줄인다
-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사
- 식품 가지고 장난치지 말 것
- 유기농 쌀 재배
- 물가 안정
- 유기농 재배 연구
- 친환경 농산물 재배
- 자녀들이 식량문제나 안정성 문제에 지장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 우리 전통 음식을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 요망
- 농약 살포에 대한 식품·야채 검정제도로 신뢰도 향상
- 농산물 품질 개량
- 농약 검출 기준 강화
- 무분별한 중국산 농산물 수입
- 농산물 가격 변동 심하다
- 농사짓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 쓰는 것
- 영리 목적 아닌 건강을 위한 농사에 종사
- 전업농 육성으로 수입 개방 시 경쟁력 강화

⑤ 농업 통상협상

- 통상 협상에서 농업만 분리하면 설자리가 없어짐

- 수입 쇠고기 협상하지 말았으면
- 쇠고기 협상 문제 제대로 해결
- 수입 농산물 최소화하고 국내 농산물 확대해야
- 농촌 사람들의 의견 수렴
- 농업 협상 잘 되서 나중에 곡물 지급 잘 되었으면

⑥ 쌀산업 정책

- 쌀 수입 개방하면 농촌의 쌀 생산 농가 정부에서 지원
- 쌀 개방 확대 더 이상 하지 말것
- 쌀 농사 지을 때 비료, 농약값, 기계값 부담이 큼
- 쌀 대신 기술과 3차 산업 육성 위해 농지 대폭 개발하여 GNP 높였으면
- 쌀 가격 올려서 농민들의 경제 살리는 정책
- 쌀 정책을 잘해 농민 수매 등을 잘 받았으면
- 식량 증대에 힘써야
- 식량 자급자족을 더 늘릴 수 있는 정책
- 수입 줄이고 국산 이용하도록
-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위한 가격, 생산성 정책 필요
-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지원
- 쌀 생산 위해 농촌 살려야 함
- 농업인의 의견 존중해서 쌀 개방 폭을 조절
- 우리의 주식인 쌀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야 함
- 수입쌀 가격이 너무 낮아 경쟁력 없다

⑦ 영농자금, 농가부채

- 1년 동안 열심히 해도 부채가 줄지 않는다
- FTA 등 국제 협상에서의 주도면밀함
- 대출금 환수해야 함
- 농가 부채 줄여줬으면

- 농산물 수입 올릴 수 있는 아이템 개발
- 도시 자녀에게 들어가는 영농자금으로 인한 농가 부채 개선
- 부채를 정부에서 무이자 대출
- 영농 보조금 지급
- 농민 부채 많으므로 대출 이자 낮췄으면
- 잘 절충했으면
- 영농 자금 저리 대출
- 이장이나 지도자는 영농 자금을 많이 받아 사용하나, 영세 농민은 대출 못받음
- 생산비에 대한 소득 낮아서 부채가 늘어나므로 국가 예산 확대
- 농가 부채 해결할 수 있도록 소득원 늘려야
- 농가 부채 늘어나는 이유는 판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임
- 농가 부채 대책 마련
- 농가 부채는 나라 정책이 잘못되어서 늘어나는 추세다
- 영농 자금 제대로 썼으면
-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 부채 증대
- 국가가 장비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해주었으면
- 중·장기 저리 자금 농민에게 제공
- 현실 정책으로 부담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사료 가격이 내려야 부채 적어진다

⑧ 농촌인력, 후계인력

- 향후 농촌 후계인력이 없을 것임
- 농촌에 희망 줄 수 있는 정책
- 완전 기계화로 고령자들도 농사 지을 수 있게
- 농촌 인력 양성
-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경우,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필요
- 인건비 비싸다
- 도시처럼 기업화

- 젊은 세대가 농촌 이팔 수 있게 정부가 뒷받침
- 농촌에 특수목적 학교 더 많이 지었으면
- 질 좋은 농산물이나 새로운 작물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
- 농사 짓는 제도 홍보
- 노령층이 대부분이라 복지 정책 늘려 농촌 인구 증가시킬 수 있도록
- 젊은층이 종사할 수 있게 다양한 농업 종류 확보
- 농촌에 머물 수 있는 대책 마련
- 귀농인들에 대한 혜택
- 젊은 후계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펼쳤으면
- 쌀 자급자족은 국가 제2의 국방력임
- 농업 위주의 직업이 전문직이 되어서 젊은이들의 선호도 높아졌으면
- 농촌 인력 필요에 따라 인력 정책 필요
- 인력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복지정책에 신경썼으면
- 복지 수준 향상

⑨ 농지

- 농지는 묶여있어야 하는데 상업화되어 농지 면적 적어짐
- 농지 개발 필요
- 농지 전용 허가를 할 때 투기 수단 되지 않도록
- 도시 사람도 농지 구입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⑩ 농업기관

- 다년생, 다품종 친환경 재배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농업 전문 연구개발센터 필요

⑪ 농촌 지역개발, 복지

-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
-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 각 농촌 특색을 살려 개발

- 문화적으로 도시화되어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 복지 정책에 힘써서 농촌 발전이 중요한 역할 하길
- 농촌 지역을 개발해야 농민들이 살 수 있다
- 영농인 복지 향상
- 농촌 지역에도 문화생활 여건 마련
- 농촌의 공동화 현실에 대해 정부, 사회 전체 노력 필요
- 농촌에서 사는 데 불편 못 느끼도록
- 농사와 소득원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머물 수 있게
- 농업 대학을 가기 쉽게 해서 농촌 발전시킬 수 있게
- 농촌이 너무 못산다
- 농촌 교육 개발
- 농산물을 지역마다 정해주어서 가격 폭락 없었으면
- 농산물 외에 다른 생산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 농촌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 복지시설 개선
- 학교나 병원 등 많은 복지시설 확대
- 농촌 어른들 건강 돌보미가 많았으면
- 복지시설 더 깨끗하게
-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 젊은이들도 지역에 있을 수 있도록 소득 보장
- 농산물 가격, 유통 등에 대한 관심 확대
- 농촌 지역 의료시설 첨단화
-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복지 혜택 사항
- 고소득 올릴 수 있는 품종 및 제품 생산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
- 노인들 최저 생활 보장
- 관광 장소 필요
- 농로 개설, 포장
- 낙후 지역 우선 순위로 개발

- 가격 경쟁 올릴 수 있는 지역 개발 필요
- 농촌 주거 환경 개선
- 생활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
- 운동시설 부족
- 농민에 대한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
- 농촌 교통 수단 편리해야
- 어르신들이 외로우므로 관광 산업 추진하여 사람들의 외로움 감소되도록
- 국가 경제 위해 농촌을 생산 도시로 육성
- 농자천하지대본야라 농촌지역 개발을 실감하게 하는 정책
- 농촌 관련 전문가 양성
- 농업 용수 문제 해결
- 농촌에 집을 지어 젊은 사람들이 귀향해서 살 수 있도록
- 이중곡가제를 활용
- 농촌에 공익 기능이 많이 생겼으면
- 농가의 소득은 늘리고 부채는 줄여서 안정적인 영농 환경 마련
- 농사에 들어가는 지원금 확대
- 농촌 개발하여 자주 찾아가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 필요

⑫ 농촌 자연환경

-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 관광 자원 이용
- 매해 생기는 자연 재해 대책
- 지역 개발을 하되, 자연 환경 파괴되지 않게
- 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 농가에서 쓰고 있는 농약 처리 관리
- 농촌 전원생활할 수 있는 펜션을 교육 차원에서 활용
- 그린벨트 해제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보존
- 자연환경을 관리하여 휴양지 조성

⑬ 기타

- 과학 농업 위한 인재 양성
- 농산물 품질 믿을 수 있게
- 약 안주고 농사 짓는다고 거짓말 하는 것
- 품질 좋은 과일 개발
- 인력이 없어도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촌 완전 기계화
- 특수 작물 재배에 신경 써서 개발
- 농산물 품질 향상
-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 표시 규제 확실하게
- 우리 농산물이 좋다는 인식 가져야 함
- 경쟁력 있는 브랜드 개발·판매
- 지방 도시에도 좋은 학교 설립해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 농산물 과잉 재배
- 농촌 교육환경 개선
- 질병 생기거나 위급 상황 시 병원 부족하고 질이 떨어짐

2. 농업인 분야별 건의사항

① 농업정책 전반

- 가족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정책 대책 강구 요망
- 축산농가는 도산 위기로 기름값 상승과 농가부채가 증가하여 하루빨리 지원이 필요
-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농촌인력부족 현상이 농촌생활을 어렵게 함
- 농지전용을 자제하고 식량 안보에 충실한 정책 대안이 필요
- 쌀가격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해 농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 농가 소득 보장과 후계자 양성, 농자재값 안정 등을 위해 선진국처럼 농촌 지원 요망
- 농로 포장사업을 100% 실시하고 농촌의 보험료 인하, 쌀값 인상, 비료값 보조 실시
-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대책이 있어야

- 농촌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을 세워주길
- 농산물 가격의 하락, 영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농촌에 보조금 지원 정책을 세워주길
- 농산물 유통 가격과 물가를 확실하게 조정하고 쌀산업 정책과 농자재 가격 조정 필요
-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되도록 농산물 가격 형성과 농업직불제 상승시켜 주길
- 정부가 농산물을 전량 구매해야
- 농산물 생산에 대한 관련 통계 조사를 잘하여 농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길
- 원자재값 폭등과 농축산물 값의 폭락에 따른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 필요
- 장기적인 안목으로 책임감 있는 농업정책 실시 요망
- 농업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장기 혜택을 주고, 우리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 농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으로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의 농가 지원 대책 수립해야
- 농업인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요망
- 농업인의 사기양양과 의욕이 생기는 농업정책 필요
- 농업인이 생산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길
- 농촌 인구는 줄어만 가는 등 정부는 농촌의 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해주길
-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좀 더 심사숙고 하여 진행해주길
- 농민들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필요
- 농업정책은 일관성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수립해야
-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농업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 농업정책을 장기적으로 세워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 농업정책을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 농업정책의 문제해결이 농협으로 모두 이관해 진행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농자재 및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농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 필요
-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가 수익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
-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여 젊은 사람들도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 농촌 고령노인들에게도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필요
- 농촌의 고령화로 도시의 젊은이가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 농촌 품목별 대규모화 사업을 실시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

- 농촌에 맞는 정책, 농민이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만한 정부의 유입책이 필요
- 농촌에서 농업 이외의 방법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농가 소득 지향 필요
- 농촌에서는 논농사가 가장 우선이며 필요함을 홍보해야
- 농촌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낮은 농가소득과 농촌의 고령화 진행으로 정부의 관심 요망
- 농촌의 일손돕기, 농산물 유통개선, 쌀값 정책 확충, 비료값 인하 등의 정책 필요
- 도농간 심한 소득격차로 농민들의 의욕 상실 유발
-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생활의 안정성이 떨어져 어려움
- 농가부채 탕감과 모든 농자재 유통 보조금 지급 필요
- 비료값, 사료값 대폭 인상과 수매가의 동결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 생산농업보다 상업적 농업을 지향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쇠고기 수입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한우 소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소규모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수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수출기업만 지원하지 말고 농촌을 지원하여 식량 자급자족 국가를 만들어야
- 식량 자급자족을 법제화해 추진해야
- 우리나라도 식량안보에 신경 써야
- 먹거리 자급자족을 통한 농업, 농민 보호가 이루어져야
- 어려운 농촌을 보람있는 농촌으로 만들어 주길 요망
- 식량 자급자족에 힘써야
-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 저소득층 농가에 가야 할 연금이 부농에게 흘러가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 필요
-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농업정책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 정부는 하루속히 녹색자립정책을 농가에 실시해야
- 농업 정책을 중요시하는 정책 필요
- 비료값, 농자재값을 인상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움
- 정책적으로 농기계 대여 등 식량증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 FTA 후속 조치로 대형유통시설 및 원예 사업 추진에 대해 사업조건을 완화해야
- 축산물 도축시설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 필요
- 현정부의 농업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농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해야

② 농산물 유통, 가격

- 가격 하락 시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산지 폐지로 가격 안정화를 도입해야
- 농산물 가격 안정 필요
- 공공비축미 가격을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데까지 현실에 맞게 책정해야
- 공산품의 물가는 날로 치솟는데 농산물 가격은 날로 저하하여 농촌의 미래가 우려됨
- 기름값 등 농자재 및 노임의 상승으로 쌀값도 올려주길 요망
-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이나 가격은 유통공사나 농협에서 전담해야
-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협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
- 농산물 가격 하락, 영농비 및 농가부채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 농산물 가격도 공산품과 같이 변동없는 정책이 필요
- 농산물 가격의 최저 가격보장제 실시를 통하여 안정생산을 보장해야
-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시세 변동이 너무 심해 어려움
- 농산물 출하 시 판매장소를 한곳에만 둘 것이 아니라 대도시로 분산하는 정책 필요
-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중간 유통비가 40%가 되는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이 적극 나서야
- 농산물 유통 가격이 턱없이 높아 어려움
- 농산물 유통가격 인하 필요
- 농산물 유통가격 표시제 실시, 유통개선, 영농 자재 정부 지원 요망
- 농산물 유통과 가격의 안전성 요망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 사이의 가격차가 많아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중개사가 제대로 판정가격을 책정하지 않아 어려움
-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여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받아야
- 농산물 유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가부채는 장기적인 지원 필요

- 농산물 유통에서 저온저장고의 확대 지원 필요
- 농산물 유통의 문제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어 직거래 형성 필요
- 농산물 유통체계가 농민을 위해 재정비 되어야
- 농산물 판매의 안정성 필요
-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가격 보장이 확실해야
- 농산물 가격과 유통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없어 우려됨
- 농산물을 생산·출하 시 낮은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필요
-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민은 오직 생산에만 전념하고 정부는 가격을 사전 약정해주길 요망
- 농산물의 생산비가 먼저 보장된 다음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 농산물의 생산비가 올라가도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여서 어려움
-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필요
- 농산품은 공산품에 비해 노력의 대가가 너무 차이가 나 어려움
-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값을 받게 해야
-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길
- 농자재, 농기계, 인건비 등 영농자재비는 인상되었지만, 농산물 가격은 5년전과 비슷해 어려움
-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심한 가격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해야
- 농협이 농산물 판매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정책적인 지원 필요
- 농축산물 원가계산을 공산품처럼 정부에서 관리하여 적정 소득이 보장되도록 보호해야
- 농축협에서 주체가 되어 중간 유통경로를 정확히 잡아야
- 농협을 주체로 생산자 간 조직화를 통한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의 현실화 필요
- 농협이 주도적으로 농산물 유통을 책임져야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을 것
- 모든 영농인에게 공평한 유통가격 제시 필요
- 정부는 유통체제 개선이나 원산지 표시 적발에 대한 과감한 처벌 필요
- 비료 등 영농자재값은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은 과거와 동일해 농산물 유통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비료값, 기름값 등은 많이 올랐으나 농산물 값은 변화가 없어 대책 마련 필요
- 비료값, 농자재 값은 올랐으나 농산물 구매가격은 그대로여서 어려움
- 비료값, 농자재 값은 인상했으나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로 적자 농사를 하고 있어 어려움

- 농자재값은 인상됐지만 농산물 시세는 10년전과 별 차이가 없어 어려움
- 비료값은 100% 인상되었으나 농산물은 인상되지 않는 현실에 어려움
- 농자재값은 인상했는데 농산물 가격은 과거와 동일해 농산물 가격을 올려 소득을 보장해주길
- 생산원가에 필수품목의 가격 안정 필요
- 생산자 수익보다 유통자 수입이 더 많은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생산자보다 판매자가 수익을 더 많이 보는 등 농산물 유통과정의 문제 해소 요망
- 생산자와 소비자 간 가격 격차가 많으므로 중간 마진 폭리를 없애야
- 생산자와 소비자 간 가격차이 심화현상을 줄이는 유통체계 필요
- 생산자와 소비자 간 농산물 가격의 차이가 너무 심해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필요
- 생산자와 소비자의 농산물 가격이 기하학적으로 차이가 나 농산물 가격을 올려야
- 농산물 유통에 대한 법적제도를 마련해야
- 생산자의 판매가격과 소비자 구매가격의 차이가 커 농산물 유통 마진을 줄여야
- 선진국처럼 농민은 생산에만, 농산물의 구매·판매는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이 되어야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
- 농산물 가격을 보장 못한다면 영농자재에 대한 지원이라도 요망
- 영농비 50% 이상 지출하는데,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계속되는 적자 영농이 어려움
- 영농자재 값은 인상되나 농산물 값은 변동이 없어 농민들은 어려움
- 영농자재값 상승 대비 농산물 가격에 맞추어 농산물을 구매해야
- 영농자재의 가격 및 비료값을 내리고, 농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 영농자재 상승에 따른 정부의 대책 필요
- 정부가 농촌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농산물 유통 문제를 해결해야
- 중간상인들이 너무 많아 출하가격은 낮는데 소비자가 너무 비싸 대책 마련 필요
- 농민들과 소비자가 모두 손해를 보고 있어 농산물 유통 개혁 필요
-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과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 현재 비료값, 농기계값, 노임 등은 상승하는데,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량이 줄고 있어 어려움

③ 농업개방, 국제협상

-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비 상승으로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어 어려움
-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하락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
- 농축산물 수입대체 작물의 생산·소득을 보전해 국내 농축산물 생산량을 적정수준 높여야
- 미래지향적인 소득과 삶의 질, 고품질 농산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처해야
-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수입개방을 국민과 토론해서 결정해주길 요망
- 수입 농축산물의 피해 해소를 위해 직접 지불제를 확대 실시해야
- FTA 협상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지원 혜택의 공평성 필요

④ 쌀산업 정책

- 농촌 쌀생산가 보장 요망
- 다른 물가는 배 이상 상승하는데 농촌의 쌀값은 10년전 가격 그대로여서 어려움
- 모든 물가는 상승하는데 곡물가는 몇년전에 비해 하락하여 어려움
- 물가상승에 비해 쌀가격은 그대로여서 현실에 맞는 가격 인상 필요
- 비료, 농약 등은 전년보다 가격이 인상되었으나 쌀은 예년과 변동없어 문제가 심각함
-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는 상승하나 쌀값은 과거와 비교해 오히려 하락한 상태임
- 비료값, 농자재등 쌀농사에 대한 생산비 보장 대책 필요
- 비료값, 농기계 임대료 등 모두 인상되었으나 쌀 시세는 5년전 가격으로 동결되어 어려움
- 현 농촌 실정에 맞는 수매가격을 설정해야
- 생산되는 쌀의 전량을 정부가 수매하여 유통한다면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 수매가 인상 필요
- 수매가는 하락하는데 농자재값은 오르고 있어 수매가 인상을 위한 정책 필요
- 쌀 자급자족을 식량안보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 쌀값의 안정화 필요
- 쌀값은 그대로이고 농자재값은 비싸니 쌀농사가 어려움
- 쌀값이 농촌의 인건비에 맞게 정부에서 지원해야
- 쌀농사를 하고 있으나 생산비 미달로 생계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농사에 대한 의욕상실
- 쌀산업 정책이 활성화되면 농업·농촌에는 농업의식이 되살아 날 것

- 쌀산업 정책은 일관성있게 꾸준히 지속되어야
- 쌀수입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우리쌀의 가격안정에 신경 써야
-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므로 다른 물가와 비교하여 쌀값 대책을 세워야
- 기름값, 비료값 인상에도 쌀값 대책은 없으니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
- 쌀은 우리의 먹거리이자 농촌 농민들의 소득원임을 잊지 말아야
- 쌀을 2중 가격제도를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자녀에게 농사를 물려줄 수 있어야
- 쌀을 살리기 위해선 영농의 수지타산을 맞게 해주어야
- 영농비 급등으로 정부는 30% 이상 공공비축 양곡가격을 올리고, 물량도 20% 더 받아야
- 저소득층을 위한 추곡수매 가격을 인상해야
- 정부수매 가격도 다른 물가 상승과 같이 올려야
- 정부수매를 확대매입 요망
- 정부의 벼 수매 양이 너무 적어 정부는 수확한 벼의 100%를 수매해주길
- 친환경 쌀 생산 검증을 확실하게 해야

⑤ 영농자금, 농가부채

- 현재 농가부채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아 이를 위한 지원책 필요
- 경제가 어려워 농가부채가 점점 늘고 있어 정부의 지원 요망
- 영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쌓여만 가는 농가부채에 대한 저리자금 장기 분할 상환 요망
- 농가 부채 전액 탕감 요망
- 농가 부채 탕감 정책 필요
- 농가부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무이자, 분할상환 등이 필요
- 농가부채 연기 및 저이자 부담 정책 필요
- 농가부채 장기간 연장 및 탕감 정책 필요
- 농가부채 지원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 강화 필요
- 농가부채 탕감, 농자재 인하 등 필요
- 농가부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농가부채 탕감제도 개편 필요
- 농가부채가 많이 늘고 있어 장기저리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 농가부채 해결 필요
- 농가부채는 무이자에 장기 분할상환 제도 필요
- 농가부채를 장기 저금리로 해주길 요망
- 농가부채를 장기 저리 자금으로 전환해야
- 농가부채를 저금리로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 농가부채는 악순환으로 영농의 규모와 노력을 평가하여 농가부채 해결 필요
- 농가부채에 대한 금리 인하와 자기 상환으로의 변환 필요
- 농가부채로 인해 농가는 갈수록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 농가부채의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장기저리로 해야
- 농가부채의 상환을 장기분할 상환으로 바꿔야
- 농가부채의 이자를 낮추고, 분할상환제를 도입해야
- 농사를 의욕적으로 지어도 농가부채만 늘어나 어려움
- 농산물 가격은 낮아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 받아야 농가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
- 농산물 값 불안정으로 농가부채의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한 저리 융자 실시 요망
- 농업 소득에 비해 각종 영농자재, 유가 인상으로 농가부채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
- 농업인 연대보증피해자에 대한 구제 필요
- 여건 변화에 맞는 영농자금 상향 조정과 기존 농가부채의 이자율 하락과 경감 대책 필요
- 농지매매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서 농가부채를 쉽게 해결해 주어야
-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부채는 늘어만 가 정부에서 이를 해결해주길 요망
- 비료값, 사료값 급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여 농가부채 갚기가 어려움
- 수확 이익이 없기 때문에 농가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악순환이 반복되는 농가부채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 영농자금 금리를 인하해야
- 영농자금 이율을 낮추고 상환기일을 2년 이상 연기해야
- 영농자금 지원 확대
- 영농자금 확대지원과 농가부채 경감 대책 필요
- 영농자금은 영농규모에 맞게 제공해야
- 영농자금을 많이 주어서 농가부채를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해주길 요망

- 영농자금을 보증없이 대출하고 언제나 농사에 필요한 시기에 수시 시행 요망
- 영농자금을 장기 저리 자금으로 확대 지원하고 농가부채 해결 요망
- 영농자금의 금리 인하로 수입개방 및 수출에 의해 피해가 되는 부분에 도움 필요
- 영세한 농민도 영농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 현 정부의 농가부채 탕감 공약에 대한 실천 요망
- 장기적인 영농자금을 주어 이율이 낮고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제도 필요
- 저소득 농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농가부채, 영농자금의 확대 필요
- 농민에게 무이자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필요
- 정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에게 지원하고 연속적인 관리 필요
- 현재 농촌은 농산물의 판매만으로 채무정리는 불가능하므로 정부에서 신경 써주길
- 현행 영농자금을 확대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부채도 탕감이나 저리자금으로의 대체 필요

⑥ 농촌인력, 후계인력

- 10년 후면 농촌인력이 감소하고, 젊은 인력도 부족할 것
- 규모화된 영농시설 지원, 안정적인 소득 보장으로 젊은 후계 인력이 농촌으로 돌아오게 해야
- 농가인력 고령화로 인한 농업 생산물 감소로 농산물 가격 불균형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농번기 때 농촌에 도움이 되는 농촌인력 정책 필요
- 농촌지역이 고령화됨에 따라 젊은 사람이 농촌으로 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 농촌에 각종단체나 직장, 군인의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농촌인력 지원 방안 확대 필요
- 농어민 후계인력 양성에 정책 수립 비중 높여야
- 농촌의 후계인력 부문 만큼은 정부가 심도있고 깊이있게 연구하고 추진해야
- 농업의 후계자가 없어 빠른 후진 양성 필요
-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정부에서 농업의 기계화나 농산물 유통 등의 지원 요망
- 농촌 고령화로 인력도 없고, 인건비도 비싸 어려움
- 공공근로라 하여 인력을 착취하면 농촌 인력은 더욱더 부족한 상태가 되므로 어려움
- 농촌마다 후계인력이 없어 장래가 불투명해 영농 후계자 양성에 관계기관의 지원 필요
- 농촌의 노령화로 후계인력 양성 필요
-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어 노인들만 힘든 농사를 하고 있어 어려움
- 노인이 농사하고 일손도 부족하여 어려운 실정으로 해결책 필요
- 인력부족과 후계인력이 너무 빨리 없어져 농촌의 미래가 우려됨
- 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은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 전국의 학구 개편 필요
- 농촌 노령화 문제, 농촌 인력과 후계 인력은 매우 심각해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요망
- 농촌의 후계인력 충원이 시급
- 농촌인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대책마련 필요
- 농촌의 노령화로 농고나 농대를 나온 전문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 농촌인력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여 휴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 요망
- 농촌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어 어려움
- 농촌의 미래에 대비한 농촌 후계인력 필요
- 낮은 수익으로 농촌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수확 금액이 적고, 인건비가 낮아 일하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
- 앞으로 10년 후면 농사지를 사람이 없어질 전망이므로 농촌 인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
- 영농정착 의욕이 있는 후계자(30세 미만)에게는 농지 구입, 자녀 교육 특혜 등 과감한 정부 지원 필요
-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므로 대책마련이 필요
- 인력 부족으로 유휴 농지가 늘어만 가고 있는 등 농민에게 힘이 되는 농업정책을 펴주길
- 정부는 정책적으로 젊은이가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 젊은 후계인력을 위해 정부에서 각종 세금 및 세제 혜택을 주어 농촌에 정착토록 해야
-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이 우선
- 정부는 농촌의 후계 인력 증진에 힘써야
-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능률 저하로 후계 인력 육성에 힘써야
- 현재 농촌에는 인력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 농촌 노인을 위한 정책 필요
- 현재 젊은 농촌 지킴이를 위한 충분한 교육과 더불어 자금 지원이 절실함
- 후계 인력 시급
- 후계자 육성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정책적인 사후관리가 필요

⑦ 농지정책

- 농업 생산성이 열악한 불량농지는 비농민도 무한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필요
- 노령으로 인하여 농사를 못하게 되어 농지를 매각할 시 각종 세금을 면제해야
- 노령화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를 매각할 때 양도세 지급 방식의 개편 필요
- 농민이 자유롭게 농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제도 폐지 요망
- 농민이 농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농지라 해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도 필요
- 농업진흥지역이라 해도 농지매매가 이루어져야
- 농지매매 자유와 양도소득세 부과 완화 조치 필요
-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 완화로 농업인의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길 요망
- 농지매매 시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도록 해야
- 농지의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나지 않아 타사업의 전환이 어려움
- 자유로운 농지 매매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길 요망
- 농촌의 농지를 도시민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해야
- 농촌지역에도 다용도 공장을 신축해 농가소득 증대나 젊은 후계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해야
- 휴경지 및 조건 분리 지역을 산지 개발하고 진흥지역내 겨울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야
- 우량농지의 잠식현상은 심각해 우량농지가 타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
- 전국 도로망 확충으로 농지가 잠식돼 쌀산업 정책이 우려됨
- 산간오지에 진흥지역으로 고시해 매각이 불가능한 지역은 과감히 해지해야
- 현 정부의 농지 정책은 전혀 효과없는 정책으로 현실적인 방안 필요

⑧ 영농자재

-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산물 가격은 변함 없는데 자재비는 폭등해 어려움
- 각종 영농자재 및 비료값은 상승되나 농산물은 인상되지 않아 어려움
- 영농자재 및 비료값을 대폭 낮추어야
- 영농자재와 농산물 값이 맞지 않는 경제 논리 때문에 농촌은 너무 어려움
- 국제 곡물값, 농자재 값 상승과 벼 수매가 하락으로 매우 불안함
- 기름, 비료, 농자재, 사료값 등이 대폭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보조 혜택은 줄어들어 어려움
- 각종 영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영농 포기 상태임

- 기름값, 비료값 등 모든 농자재 인상폭이 커 농사를 짓는 데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어려움
- 기름값, 비료값 등의 상승과 면세유 감소 등으로 농촌의 실정이 어려움
- 영농자재의 급상승으로 시설투자의 비용과 영농소득이 어려움
- 기름값 인하해 주길 요망
- 농가 면세유가 너무 적어 농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 농기계를 정부가 구입회수하고 이를 농민에게 염가로 임차토록 하는 정책 필요
- 농기계 공급을 확대 지원하고 영농자재를 제때 공급해야
- 농기계, 시설하우스 등을 위한 면세유가 부족해 확대지원 필요
- 농기계의 대형화로 구입비도 오르고 연료 소모도 커 면세유 지원 확대 요망
- 농기계 사용료를 보상해주는 제도 필요
- 농기구 구입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요망
- 농사 전과정을 기계화해야 농업소득도 안정되고 수입농산물과의 가격경쟁이 될 것
- 농자재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면세유도 공급을 확대해야
- 농기계 은행이 빨리 실행되어야
- 농산물 가격은 싼데 비료값 등은 50% 이상 인상되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어려움
- 농산물 가격 인상과 비료값 인하 요망
- 농약 정찰제가 아니어서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개선해야
- 농자재 급상승으로 정부에서 농가에 최대한 지원을 해야
- 농자재, 비료,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인력마저 구하기 어려움
- 농자재값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농산물 값 동반 인상이 절실함
- 농촌 생활이 여유있게 지도하고 비료값을 싸게 판매해야
- 농촌 소득 증진을 위해 농자재 비료, 사료, 기름 값을 내려야
- 면세유 계속 지원 및 비료값 하락 요망
- 면세유 지원 양 증가와 비료값 등 농자재 가격의 인하 요망
- 면세유 등과 같이 꼭 필요한 영농자재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함
- 면세유를 필요한 만큼 배정해야
- 비료 및 영농자재 값을 인하해 영농 의욕 고취
- 비료, 기름값 인상으로 농사를 지어도 수입이 적어 어려움

-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값을 인하해야
- 생산비가 너무 올랐고, 적은 면세유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어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시점임
-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값이 너무 비싸 인하 조치 필요
- 비료값 및 영농자재의 대폭적인 지원 필요
- 비료값 인상으로 생산의 차질이 우려되어 정부의 보조금 지원 필요
- 비료값 인하 및 쌀 전량 구매 필요
- 비료값, 면세유, 사료값, 농자재값, 농약 등을 지원해야
- 비료값이 급등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많아 비료값 보조 필요
- 농자재값 상승과 농기구의 절도 사건 등으로 농촌은 어려움
- 비료값이 너무 올라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으로 정부에서 영농자재값을 지원해야
- 농자재값 인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면세유마저 중단하면 매우 어려워짐
-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확대 지원 필요
- 농기계 임대료 등을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 농기계 저가 판매 실시
- 영농자재 값 인상과 농산물 값 하락으로 과거와 같이 비료가격 지원과 농자재 가격 인하 해야
- 영농자재 값을 정부에서 보조해주길 요망
- 영농자재 과대 인상으로 농촌이 어려움
- 영농자재, 비료, 기름값 등은 인상되나 영농비는 매년 올라가고 있어 쌀값을 올려주길 요망
- 영농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이 없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유가인상, 영농자재값의 상승 등 농민에게 힘을 실어줄 대안 필요
- 유류값, 비료값, 사료값 인하 등의 정부지원 필요
- 너무 많이 올린 비료대는 인하 조절 요망
- 정부에서 농촌의 농자재 가격을 보조식으로 해주거나 가격 인하 요망
- 비료값 상승을 정부에서 해결해야
- 정부에서 비료 및 면세유, 농자재 가격을 50% 이상 보상해야
- 품질과 생산량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을 보조 지원해주길 요망

⑨ 농업기관

- 논직불제, 쌀직불제, 변동직불 등을 여러 부처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이 한 기관에서 관리해주길
- 농업 관련 기관을 통합해서 농업경영을 일관성 있게 해주길
- 농촌의 환경문제, 친환경 농업 추진, 수출농업의 육성 등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농촌 지도 기관 확충이 더욱 절실
- 농촌지도소를 다시 개설하고 농산물의 유통을 농협에서 지도해야 함
- 영농후계자를 양성하여 낙후되고 있는 농촌을 살리도록 국가가 잘 연구하여야 함
- 현재 농촌 기반공사에서 국비를 낭비하는 시공사업이 많아 대책이 필요함

⑩ 농촌 지역개발, 복지

- 65세 이상 지급되는 노령연금이 부족하니 현재 2인 가정에 상향 조정하여 주길 바람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실에 맞게 실시 바람
-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애매한 기준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관리 기준이 필요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 시 토지, 주택 등은 소득기준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망
-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이나 노령 연금은 전부 지불
- 형평성 없이 제공되는 노령 연금에 대한 우려
- 노인 복지 요양시설 확충요망
- 농가의 노인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향후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대 설치해야
- 농촌지역은 기초노령연금 해당 노인에게 전원 지급 요망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정확한 조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망
- 농촌지역의 고령자 80% 이상에게 노령 연금 지급 요망
-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병원비가 너무 비싸 농촌 의료에 정부가 신경써야
- 정부는 현실적으로 정확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 현재 도시와 농촌 간 복지 수준의 차가 너무 커 해결방법 필요

⑪ 영농환경 개선

- 경지 정리가 안 된 지역의 영농 조건이 어려움
- 면적이 협소한 지역은 인근 지역과 함께 경지를 정리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지원책이 필요
- 농로 확장 및 농로 포장 시급
- 산간지, 경사진 밭의 기반정리 요망 및 배수로 장마철에 흠 유실 방지책 필요
- 수리시설 부족으로 어려움
-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 필요
-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불편한 곳이 많아 개선 필요
-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는 농지는 잘 보존하고, 농업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해야

⑫ 기타

- 1차 산업은 국가의 기본 재산임
- 농업인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주길 요망
-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없어 어려움
- 손해보지 않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작목 선택이 어려움
- 쌀의 수입으로 향후 벼종자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쌀의 품종 개발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
- 축산농가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 농촌의 실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요망
- 친환경 농법에 대한 꾸준한 교육 및 관리 필요
- 지역 기후에 맞는 품종 지정 재배 필요
- 지역과 개인에게 맞는 작목을 선택하여 지원과 교육 필요
- 현지통신원 의견에 대한 피드백 체계 필요

부 록 2

조 사 표

<도시민 조사표>

<선문>

SQ 1) 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DQ 1) 지역규모

1. 특별/광역시 2. 일반 시

DQ 2) 성별

1. 남자 2. 여자

DQ 3) 귀하의 연령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또는 만 70세 이상 면접중단!!

DQ 4) 귀하는 농촌에서 사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DQ 5) 부모나 형제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농업·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식

문1) 귀하께서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2.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3.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4. 관심 있게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문2) 아래 제시하는 예문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각각 1위와 2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각 보기는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 분	1순위	2순위
㉠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1위, 2위 기재)		
㉡ 앞으로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해 질 역할(1위, 2위 기재)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2. 국토의 균형발전
3. 자연환경 보전
4. 전통문화의 계승
5. 관광 및 휴식의 장소
6. 전원생활의 공간
7. 기타(적을 것 : _____)

문3) 농업이나 농촌과 관련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촌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	1	2
㉡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1	2
㉢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1	2
㉣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1	2
㉤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1	2
㉥ 우리나라 농업이 국제 경쟁력이 있다	1	2
㉦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1	2
㉧ 우리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1	2
㉨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한다	1	2
㉩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다	1	2
㉪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가 농가소득을 보상해 줘야한다	1	2
㉫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도 약해질 것이다	1	2

문4) 귀하께서는 앞으로 10년 후의 농촌생활이 현재와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
2.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3.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4.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다
5. 현재보다 훨씬 살기 어려울 것이다

문5) 귀하는 은퇴 후 혹은 그 이전이라도 여건이 되면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1. 매우 많다 _____
2. 조금 있다 _____ ▶ 문5-1)로 갈 것
3. 별로 없다 _____
4. 전혀 없다 _____ ▶ 문6)로 갈 것

문5-1) (문 5에서 1,2번 응답자만) 그럼,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언제쯤 실천할 계획이십니까?

1. 3년 내
2. 5년 내
3. 10년 내
4. 10년 이후
5.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문5-2) (문 5에서 1,2번 응답자만)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2. 농업을 경영해 안전한 농산물을 자급하기 위해
3.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4.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5. 경로사상과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6.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7. 땅값과 생활비가 도시보다 싸므로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서
8. 기타(적을 것 : _____)

문6) 귀하는 농업·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을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많다
2. 많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없다
5. 전혀 없다

문7) 국가정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적극 찬성한다
2. 찬성한다
3. 잘 모르겠다
4. 반대한다
5. 적극 반대한다

문8)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사료용 포함) 1990년 43%에서 현재는 26%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2. 현재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면 된다
3.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쉽게 수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문9) 귀하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1. 매우 많다
2. 대체로 많은 편이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10) 귀하께서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를 중요한 순으로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3.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5. 농산물 가격 7. 농업인 교육 9. 기타(적을 것 : _____)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농식품 안전성 4. FTA 등 국제협상 6. 농가 소득안정 8. 수질 및 토양오염 등 농업환경

문11) 귀하는 새정부가 임기 중 농업·농촌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1. 매우 잘 풀어갈 것
2. 잘 풀어갈 것
3. 보통
4. 잘 못 풀어갈 것
5. 매우 잘 못 풀어갈 것

문12) 농업정책 분야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의 사회복지 확충 2.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3. 농축산물의 품질개선과 안전성 강화 4.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등 유통구조 개선 5.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촌의 자연환경 보존 6. 농촌 기반시설 확충 등 거주환경 개선 7. 농업, 농촌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와 소통기회 확대 	

- 8.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9.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농업 육성

문13) 귀하께서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더 이상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안된다
- 2. 국내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 3. 농산물 시장개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 4. 농산물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문14) 귀하께서는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1.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 2. 우리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 3.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 4. 기타(적을것 : _____)

식품안전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문15) 귀 닥에서는 식품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 1. 백화점 2. 대형할인점 3. 동네 마트 4. 재래시장
- 5. 생산지 직거래(조합 직매장 등) 6. 친환경 전문매장
- 7. 기타(적을것 : _____)

문16) 다음과 같은 식품을 구입하실 때나 외식을 할 때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	가격	안전성	품질 (맛)	브랜드 (인지도)	원산지 (국산/수입)	기타 (영양 등)
㉠채소	1	2	3	4	5	6
㉡육류	1	2	3	4	5	6
㉢곡물	1	2	3	4	5	6
㉣과일	1	2	3	4	5	6
㉤수산물	1	2	3	4	5	6
㉥외식	1	2	3	4	5	6

문17) 귀하는 식품에 대한 품질이나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 1. 식품의 포장지 표시나 문구 2. 인터넷 검색
- 3. TV, 신문 등 언론 매체 4. 지인들의 소개
- 5. 판매자의 권유(판촉 등) 6. 기타(적을것 : _____)

문18) 귀하께서는 국산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신뢰 2. 신뢰하는 편 3. 보통
- 4. 신뢰하지 않는 편 5. 전혀 신뢰하지 않음

문19) 귀하는 아래 제시하는 수입식품의 구입 의향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많다	많은편	보통	없는편	전혀없다
㉠수입 쌀	1	2	3	4	5
㉡수입쇠고기/ 미국산	1	2	3	4	5
㉢수입쇠고기/ 호주산	1	2	3	4	5
㉣수입쇠고기/기타 국가	1	2	3	4	5
㉤수입 과일	1	2	3	4	5
㉥수입 가공식품	1	2	3	4	5

문20)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 이후 귀하의 가정에서는 한우 소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 1. 많이 줄었다
- 2. 약간 줄었다 → 문20-1)로 갈 것
- 3. 그대로다
- 4. 다소 늘었다 → 문21)로 갈 것
- 5. 많이 늘었다

문20-1) (문 20에서 1,2번 응답자만) 귀하의 가정에서 한우 소비가 줄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수입이든 한우든 상관없이 쇠고기 먹기가 꺼려져서
- 2. 수입육과 한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서(원산지표시 불신)
- 3. 한우도 광우병과 같은 위험요인이 있다는 걱정 때문에
- 4. 수입육 불신으로 한우 가격이 올라서
- 5. 기타(적을것 : _____)

문21)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8년 7월 8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시행 되었습니다. 귀하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음식을 주문하십니까?

- 1. 꼭 확인한다 2. 확인하는 편이다
- 3. 확인하지 않는다 4. 음식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문22) 귀하는 원산지 표시제 강화가 식품을 믿고 선택하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 1. 매우 실효성이 있다 2. 실효성이 있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 4. 실효성이 없는 편이다 5. 전혀 실효성이 없다

문23) 귀하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문24) 귀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1.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
- 2.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저투입농업
- 3. 환경을 건실하게 유지·보전하는 농업
- 4. 우리 조상들이 즐겨 썼던 방식의 농업
- 5. 잘 모르겠다

문25)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3단계(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와 인증기준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2. 상당 수준 알고 있다
- 3. 약간 알고 있다
- 4. 전혀 모른다

문26) 귀하께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주요 동기를 중요도 순으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4
------------	------------	---

- 1. 안전성·가족의 건강을 위해
- 2. 판매자(판매처)에 대한 신뢰 때문에
- 3. 환경보호를 위해
- 4. 주변친지나 대중매체의 홍보와 추천 때문에
- 5. 영양가가 높을 것 같아서
- 6.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 때문에
- 7. 생산자에 대한 신뢰 때문에

문27) 귀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 1. 매우 신뢰
- 2. 신뢰하는 편
- 3. 그저 그렇다
- 4. 신뢰하지 않는 편
- 5. 전혀 신뢰하지 않음

문28) 귀하께서는 국산 유기농산물(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유기가공품 포함)과 수입 유기농산물 중 안전성 면에서 어느 것을 더 신뢰하십니까?

- 1. 국산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
- 2. 수입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
- 3. 모두 신뢰한다
- 4.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 5. 잘 모르겠다

농촌복지와 환경에 대한 인식

문29)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하는 편 3. 보통
4. 불만족하는 편 5. 매우 불만족

문30) 귀하께서는 현재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1. 매우 높다 2. 높은 편 3. 보통
4. 낮은 편 5. 매우 낮다

문31) 귀하께서는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특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다소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32) 귀하는 농촌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 2. 찬성하는 편 3. 보통
4. 반대하는 편 5. 매우 반대

문33) 농촌의 고령농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	------------	--	------------	--	------------	--	------------	--

1. 아플 때 교통수단 2. 생활비 3. 게이트볼장 등 놀거리
4. 먹을거리 제공 5. 경로 돌봄이

문34) 농업정책이나 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1. 농업정책	2. 농촌관광	3. 농산물 유통, 가격
	4. 농산물 안전성	5. 농업 통상협상	6. 쌀산업 정책
	7. 영농자금, 농가부채	8. 농촌인력, 후계인력	9. 농지
	10. 농업기관	11. 농촌 지역개발 복지	12. 농촌 자연환경
	13. 없음	14. 기타(적을 것 : _____)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하니까? _____ 번

내용 기재 ✎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Q 6) 실례지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임/어업 종사자 (가족 종사자 포함)
2. 자영업자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3.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정부/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4. 전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5. 기술공 및 전문직 (컴퓨터 전문직, 경찰, 소방수, 철도기관사,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등)
6.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7.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 등)
8. 판매종사자 (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부, 전기·전자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예 종사자 등)
1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11. 단순노무종사자 (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12. 학생
13. 전업주부
14. 직업군인
15. 무직
16. 기타
99. 모름/무응답

DQ 7)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 | |
|--------------|--------------|
| 1. 초등학교 졸업이하 | 2. 중학교 졸업 |
| 3. 고등학교 졸업 | 4. 대학교 재학 이상 |

DQ 8) 현재 함께 살고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 수입은 얼마정도입니까? 임대소득,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 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 1. 150만원 미만 | 2. 150만원~249만원 | 3. 250만원~349만원 |
| 4. 350만원~449만원 | 5. 450만원 이상 | |

<농업인 조사표>

■ 농업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

문 1) 귀하는 현재 농촌 생활여건에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문 1-1) (문 1에서 ④, ⑤번에 답하신 분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 ② 교육 여건 열악 ③ 의료시설 등 복지 미흡
④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 ⑤ 문화·여가시설 미흡 ⑥ 기타()

문 2) 앞으로 10년 후의 농촌생활이 현재와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재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 ②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다
⑤ 현재보다 훨씬 살기 어려울 것이다

문 3) 귀하께서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것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문 3-1) (문 3에서 ④, ⑤번에 답하신 분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소득 보장 미흡) ②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③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④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 불안
⑤ 농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좋지 않다 ⑥ 기타()

문 4) 귀하는 자녀에게 영농을 승계할 계획입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문 4-1) (문 4에서 ②번 응답하신 분만) 자녀에게 영농을 승계할 계획이 없으면 은퇴 후 경작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 ① 매각 ② 임대 ③ 인척이나 타인에게 승계 ④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

■ 농업정책 수요와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문 5) 귀하는 새정부가 임기중 농업·농촌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매우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 ② 기대하는 편 ③ 보통
- ④ 별로 기대하지 않음 ⑤ 전혀 기대하지 않음

문 6) 귀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그렇다 ④ 대체로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문 7) 농업정책 분야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농업인의 사회복지 확충
- ②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 ③ 농축산물의 품질개선과 안전성 강화
- ④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등 유통구조 개선
- 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촌의 자연환경 보존
- ⑥ 농촌 기반시설 확충 등 거주환경 개선
- ⑦ 농업, 농촌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와 소통기회 확대
- ⑧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⑨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농업 육성

문 8) 새정부에서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적극적인 수출농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 ①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② 쉽진 않지만 노력하면 될 것 같다 ③ 모르겠다
- ④ 노력해도 어렵다 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문 9)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등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귀댁의 영농 생산비가 1년 전에 비해 몇 % 정도 증가하였습니까? ()

- ① 변화없다 ② 30% 정도 ③ 50% 정도 ④ 100% 정도 ⑤ 100% 이상 ⑥ 줄었다

문9-1) 농자재값 상승으로 농업인 경영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것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순서대로 써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 ① 비료값 ② 사료값 ③ 기름값 ④ 비닐 등 농자재 ⑤ 농기계 임차

문 10) 귀하는 농자재 값 상승 등 영농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① 재배작목 축소 ② 재배작목 전환 ③ 재배작목 포기
- ④ 에너지절감 대책 마련 ⑤ 기타(구체적으로:)

문 28) 농업정책이나 농업문제에 대해 하고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분야	① 농업정책 전반 ② 농산물 유통, 가격 ③ 농업개방 국제협상 ④ 쌀산업 정책 ⑤ 영농자금, 농가부채 ⑥ 농촌인력, 후계인력 ⑦ 농지정책 ⑧ 영농자재 ⑨ 농업기관 ⑩ 농촌 지역개발, 복지 ⑪ 영농환경개선 ⑫ 기타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번)	
내용 기재 ✎	

■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A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

- ① 평야지대 ② 산간지대 ③ 준산간지대 ④ 도시근교

A2> 귀하는 실례지만 몇 년생 이십니까? (년생)

A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무학 ② 한학 ③ 국졸 ④ 중졸 ⑤ 고졸 ⑥ 대졸(퇴)이상

A4>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연간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작목은? ()

-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예 ⑥ 특작 ⑦ 기타

A5> 귀댁의 연평균 소득(1년 소득 중 임차료·비료·농약대 등 비용은 제외하되, 생활비는 포함)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1천만원 미만 ② 1천만원~2천만원미만
③ 2천만원~3천만원미만 ④ 3천만원~4천만원미만
⑤ 4천만원~5천만원미만 ⑥ 5천만원 이상

A6> 귀하는 언제부터 영농에 종사하셨습니까? (년부터)

A7> 귀하의 자녀 중 농업을 승계할 사람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③ 아직 모르겠다

A8> 귀댁의 경작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소유 및 임차농지는 포함하되 임대농지는 제외)
 논(평), 밭(평), 과수(평), 축산(소 , 돼지 , 닭)

참고 문헌

- 김동원, 조태희. 2001. “2000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 결과” 『농촌경제』, 24권 제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06. 「농업·농촌에 대한 200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연구자료 D1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07.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연구자료 D2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김정호. 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연구보고 R4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최경환.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연구」 연구보고 R4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석두, 황의식. 2002. 「농지소유 및 이용 구조의 변화와 정책 과제」 연구보고 R4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세익, 김동원, 박혜진,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보고 R4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2005.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연구자료 D248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11.

발 행 2008. 11.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